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일·가족연구실에서는 “미혼모 자립지원의 주요쟁점과 해법(I)”이라는 주제로 2009년 제 3차 가족·보육정책 포럼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미혼모와 이들 자녀에 대한 관심이 새로워지는 시점에서 이들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쟁점들을 살펴보고 이를 위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부디 참석하시어 함께 귀한 의견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9년 7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일·가족연구실장 김 태 홍

발 표 1

◆ 미혼모에 대한 법적 문제와 해결방안 1

발표자 : 차선자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자 :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발 표 2

◆ 학생미혼모 실태와 학업지속을 위한 교육복지적 대안 연구 37

발표자 : 석창훈 (고려대학교 연구위원)

토론자 : 은성호 (보건복지가족부 가족지원과장)

◇ 주제발표 1 ◇

미혼모 자립지원의 주요 쟁점과 해법(Ⅰ)

미혼모에 대한 법적 문제와 해결방안

차선자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미혼모에 대한 법적 문제와 해결방안

차선자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들어가는 말

1. 문제의 제기

한국사회에서 미혼모는 여전히 온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혼모의 현황에 대한 각종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미혼모는 여전히 사회적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며, 미혼의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할 것을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는 행위 자체가 여성 고유의 비순응적인 성향의 반영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러한 성향으로의 낙인은 다시 미혼모가 각종의 사회 진출을 하는데 장애로 작용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미혼모는 한국사회에서 자신의 노동을 통한 자립과 자신의 선택에 의한 자녀의 양육을 결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에 노출 되도록 하고 있다.

이 연구는 미혼모에 의한 자녀의 출산과 이로 인하여 파생하는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법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또한 법이 그와 같은 역할을 위하여 어떻게 재정립 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미혼모의 정의

미혼모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기존의 연구에서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국가의 입장에서 혼인신고의 형식적 유무에 의하여, 합법적이고 정당한 혼인절차 없이 아이를 임신 중 이거나 출산한 여성을 미혼모로 정의하였다. 그러므로 혼전 임신 상태에 있거나 혼전에 자녀를 출산 한 여성 및 혼인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녀를 출산하는 여성 모두가 미혼모로 분류하였다¹⁾. 물론, 임신은 했으

* 이 발제문은 필자가 수행한 대법원의 용역과제 변화하는 가족에 따른 법률문제의 내용을 일부 보완한 것입니다. 완성된 논문이 아니므로 인용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1) 한국여성개발원, 미혼모의 실태분석, 1984, 22면.

나 낳기 전에 임신 중절한 경우도 미혼모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는 결과적으로 낙태의 문제를 논의할 수 있으나, 미혼모로서의 지위에서 법적인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을 아니므로 미혼모와 관련된 파생 논의에서는 제외하도록 한다.

언급한 바와 같이 법률혼의 원칙에 의하여 혼인신고 유무를 기준으로 미혼모를 판단하면, 이혼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도 출생자가 혼인 중의 자로서 친생자 요건을 갖추지 않는 경우 (민법 제844조) 미혼모의 범위에 포함될 것이다.

반면에, 법률혼을 해체하지는 않았으나 이혼에 서로 합의하고 별거하여 양자 사이에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부부상태로 남아 있는 사실상 이혼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미혼모의 출산으로 분류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해 판례는 자의 포태기간 동안 부가 장기간 해외근무, 교도소의 장기 수감, 사실상 별거 등으로 인하여 그 기간 중 처가 부와 동거한 사실이 없어서 도저히 아이를 포태할 수 없는 객관적인 명백한 사유가 있는 데도 아이를 출산한 경우라면 혼인 중 출생자로 추정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²⁾. 물론 동 판례의 입장이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친생자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미혼모의 출산으로 분류하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상 이혼과 친생자관계의 단절을 어떻게 이해하고 정의하는지에 따라 재해석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사실상 이혼이란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별거하여 양자 사이에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면서 이혼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정의 된다³⁾. 사실상 이혼으로 인정될 경우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및 정조의 의무 등이 원칙적으로 소멸하게 된다⁴⁾. 이와 같이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므로, 양 당사자의 관계의 지속성이 전제되어 지지 않는다면 친자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우리 법이 친생자 관계의 본질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지 명시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어도 친생자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입장은 그 근거는 혼인신고가 존속하고 있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법률상 자의 신분귀속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혼인신고가 존재하고 있는 한, 자는 친생자 추정이 없어도 혼인 중의 자로 취급되어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친생자 관계가 본질적으로 혼인신고의 유무에 의하여 판단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를 출산할 수 있는 생활공동체의 실체가 존재하였고 그에 의하여 자가 출산되었다는 사실에서 친자관계의 본질을 찾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가 의문시 된다. 만일 후자에서 친자관계

2) 대법원 1988. 5. 10. 88므85.

3) 김주수,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5, 183면.

4) 대법원 1979. 10. 30. 79다1344.

의 본질을 찾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혼상태에서 친자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실체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의 출산을 미혼모의 출산으로 분류되지 않을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또한 미혼부와 지속적으로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을 미혼모의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도 다소 의문이다. 물론 현행법은 사실상의 혼인 상태를 독립 유형의 신분관계를 표현하는 형태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다. 그러나 민법은 사실혼을 개념적으로 승인하고 사실혼 배우자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출생한 자는 혼인 외의 자로서 인지에 의해서만 부와의 신분관계를 확정하게 된다. 민법의 이와 같은 입장은 배우자 관계에서는 법률혼을 극복한 사실혼 배우자 보호의 법리를 적용하며, 친자관계에 대해서는 부모가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다는 점에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중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는 민법의 입장이 친자관계에도 영향을 준다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출산하는 여성은 미혼모로 분류할 수 없을 것이다.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미혼자”에 대한 정의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언급한 바와 같이 법률혼주의를 채택하면서도 사실혼을 개념적으로 승인하는 현행 민법의 입장과는 부합하는 규정방식으로 본다. 따라서 사실혼 내지 동거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의 출산은 미혼모로 정의할 수는 없을 것이다.

법률혼을 중심으로 미혼모의 존재를 정의할 경우 본인의 자발성 여부도 미혼모의 개념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처음부터 혼인의 의사가 없으며, 단독으로 자녀를 낳고 양육하기 희망하는 여성이 인공수정을 통하여 자녀를 출산한 경우도 미혼모로 정의될 것이다.

이와 같이 법률혼의 존재 유무에 의해 미혼모를 파악하는 것은 도리어 미혼모의 다양한 범주를 아우를 수 없는 한계를 가지게 된다. 도리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미혼자”의 정의에서 제외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미혼모의 분류 방식에 의하여 미혼모를 정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즉 미혼모란 사실상의 혼인생활공동체를 전혀 형성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을 한 여성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것이 이 그 실태에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언급한 바와 같이, 미혼모의 연구 영역을 어느 범위로 정하는 가는 미혼모를 어떻게 개념 규정하는지에 의하여 좌우된다. 미혼모를 법규범의 기준에 의하여 법률혼이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한 여성으로 정의할 경우 미혼모 관련 연구 범위는 동거 및 사실혼 상태에 있는 여성의 출산, 자발적 비혼 상태에서의 출산 및 혼인의 가능성을 유보한 상황에서의 출산 등에 관련된 모든 법률적 문제가 포함될 것이다.

언급한 바와 같이, 법률혼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동거 또는 사실혼 상태가 유지 되고 있는 경우의 출산은 미혼모의 출산으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므로 본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 한다. 본 연구에서는 법률혼의 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자의 출생 시 누군가와 사실상의 혼인생활공동체를 형성하지 않고 아동을 출산한 경우, 파생되는 법률관계를 검토하는 것으로 연구범위를 한정 한다.

따라서 미혼모에 대한 법적 문제와 해결을 다음의 분야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출생자의 부와 모가 미혼인 경우, 당사자간의 신분법적인 문제는 혼인을 할 것인지 아니면 혼인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 이외에 특별히 혼인에 대한 제약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 출생자와 어떠한 방법으로 신분관계를 형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행 친족·상속법을 중심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미혼 상태에서 출산을 경험하는 미혼모와 미혼부가 각각 출생자와 법적인 신분관계를 확정하고자 할 경우 전제되어야 할 정보와 권리들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미혼모와 미혼부 및 자녀의 신분관계 확정과정에 나타나는 친족으로서의 상호 부양의 문제를 살펴볼 것이다. 셋째, 부정사용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민법의 입장에서 미혼모 자녀의 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를 검토할 것이다. 넷째, 우리사회에서 미혼모가 출산한 경우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 보다는 국외입양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현실을 전제로, 입양을 선택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미혼모와 그 자녀의 모성권과 아동의 권리가 현행 입양법에서 적절히 구현되고 있는지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혼모가 단독으로 양육을 결정하는 경우,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미혼모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하여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한다.

Ⅲ. 미혼모 가족의 신분법적 쟁점

1. 인지제도와 미혼모의 권리

1) 임의인지와 부의 지위

민법은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하여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라고 인정하여 그들 사이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임의인지와 (민법 제855조 이하), 재판에 의하여 부 또는 모를 확인하여 법률상 친자관계를 확정하는 강제인지 제도를 두고 있다 (제863조 이하).

인지에 대해 주관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민법에 의하면 인지는 진실한 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기의 자라고 승인하고 그로써 법적인 부자관계를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로 이해된다⁵⁾.

따라서 미혼부 스스로가 출생자를 자신의 자로 승인하는 것은 특별한 요건 없으며 특별히 가능한 시점상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친생부는 본인이 원할 경우 어떠한 시점에서도 인지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 인지가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도 있으나⁶⁾, 일반적으로 현행법의 해석상 금치산자의 인지가 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 이외에 (민법 제856조) 특별히 자녀가 성년인 경우, 친생부의 인지를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⁷⁾. 또한 피인지자는 원칙적으로 생존자 이어야 하나 피인지자의 사망의 경우 그에게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지할 수 있고(제857조), 포태중인 자에 대해서도 인지할 수 있다(제858조).

다만, 미혼부의 임의인지에 대한 권리는 혼인중의 친생자 추정의 원리에 의하여 제한된다. 즉 민법은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된 것으로 추정하고 (제844조 제2항),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와의 성적 교섭에 의해 포태된 것으로 추정 한다 (동조 제1항).

여기서의 혼인은 원칙적으로 법률혼을 의미하므로 친생 추정을 받는 자는 법적 배우자가 출산한 자녀를 의미한다. 그러나 통설은 사실혼을 거쳐 법률혼으로 가는 실제의 관행을 고려하여 사실혼 성립의 날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한다⁸⁾. 판례도⁹⁾ 혼인신고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동거 중 처가 포태한 경우에는 그 포태된 자의 출생일자가 부모의 혼인신고의 뒤에 있고 그 사이 기간이 200일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러한 자는 출생과 동시에 당연히 그 부모의 적출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¹⁰⁾.

이에 대해 혼인은 호적의 신고로써 그 효력이 생기도록 되어 있는 우리 민법 체계상 민법 제844조의 "혼인 중"이라는 혼인은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사실혼관계에 있더라도 혼인신고가 없으면 그 사이에 출생한子は 혼인 외의 자일 수밖에 없

5) 인지에 관한 주관주의는 인지자의 의사에 기하여 인지를 허용하는 것으로, 그에 의하면 인지는 법률 행위라고 하게 된다. 반면 객관주의는 자연적 혈연관계가 존재하면 인지를 허용하는 것으로서 이에 의하면 인지를 자연적 부자관계의 존재사실에 대한 관념의 통지로 이해한다. 이에 대한 우리 민법의 태도를 주관주의로 보는 입장, 객관주의로 이해하는 태도 및, 절충적으로 보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송덕수, 신민법강의, 박영사, 2009, 1567면.

6) 김용한,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4, 221면.

7) 송덕수, 앞의 책, 1567면.

8) 김용한, 앞의 책, 174면 ; 김주수 / 김상용, 친족 · 상속법, 법문사, 2006, 265면 ; 이경희, 가족법, 법원사, 2008, 163면.

9) 대법원 1963. 6. 13. 63다228.

10) 대법원 1963.6.13. 선고 63다228 판결은 현행 민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1924년경에 혼인한 부부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에 대한 것으로서 그 판결이유에서 현행 민법에 따른 것이 아니라 구법인 조선민령에 좇아서 기준을 삼은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근거는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

으므로, 사실혼 성립의 날로부터 기산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는 견해도 유력하다¹¹⁾.

동 규정에 의한 친생추정은 반대증거에 의하여 복멸이 허용되지 않는 강력한 것으로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이상 그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거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라도 그 자가 부의 친생자가 아님을 주장할 수 없고, 이러한 추정은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 부인할 수 없으며,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¹²⁾.

친생부인의 소는 부부일방이 제기할 수 있다. 혈연에 의한 친생자 관계가 실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모가 혼인 한 후 법률상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자가 혼인 신고 후 200일 이후 300일 내에 출생한 경우 부 또는 모가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 그 자가 자신의 친생자가 아님을 확정하지 않은 경우, 미혼의 부는 출생한 그 자에 대해 인지할 수 없다¹³⁾. 또한 친생추정을 받지는 않으나 타인의 혼인 중의 자로서 신고 되어 있는 경우 및 타인이 인지한 자에 대해서는 인지할 수 없다.

인지는 의사표시이며 동시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인지자는 행위능력을 요하지는 않으나 의사능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미혼부가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인 경우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단독으로 인지할 수 있으나, 금치산자인 경우 미혼부의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인지할 수 있다 (제856조).

미혼부가 출생자를 인지하게 되면, 법률상의 친자관계는 그 자의 출생시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그러나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 한다 (제860조). 인지는 진실한 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기의 자라고 승인하고 그로써 법적인 부자관계를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이므로, 미혼부의 인지가 있게 되면 미혼모와 미혼부는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그 지정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에 의하여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제909조 4항 및 5항).

일단 임의인지에 의하여 친생부의 지위를 확정하게 되면 친권자로 지정되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혼부는 친생부의 지위에서, 출생자의 신분관계에 개입하게 된다. 즉 인지한 미혼부가 친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 자신의 15세 미만의 자에 대한 입양의 승낙을 하며 (제

11) 박정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의 심리에 관하여, 서울가정법원 실무연구 8권 日本 最高裁昭和 41년 2월 15일 第3小法廷判決(小和 39년(オ) 제109호 認知請求事件)에서도 혼인신고 후 200일이내에 출생한 자에 대하여는 親生推定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고, 婚姻式 또는 同居開始後 200일 이후라 하더라도 이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하며, 親生推定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子は 실제 父를 상대로 認知請求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서울 가정법원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서 被告가 사실혼 성립일로 200일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제척기간의 경과를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서울가정법원 2000드단102315.

12) 대법원 2000. 8. 22. 2000므292 ; 대법원1992. 7. 24. 91므566 ; 대법원 1984. 9. 25. 84므84.

13) 대법원 1987. 10. 13. 86므129 ; 대법원 1968. 2. 27. 67므34.

869조 1문). 비록 미혼부가 인지 이후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15세 이상의 미성년인 자의 입양에 대해 부모의 동의권을 행사한다 (제871조). 나아가 인지가 출생자의 성년 이후 이루어진 경우에도 부모로서 입양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 한다 (제870조).

이 규정은 임의 인지의 요건에 시간적 제한이 없는 현행 인지제도와 미혼모와 미혼부의 관계적 특성을 고려할 때, 당사자들의 신분관계에 예기치 않은 불확정성을 야기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미혼모와 미혼부의 관계에 대한 대다수의 실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임신 사실을 알린 이후 미혼모와 미혼부의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양육을 경심한 경우, 미혼모가 양육의 실질적인 책임과 친권을 전적으로 가지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년이 된 자녀를 미혼부가 인지하고, 입양의 동의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입양에 대한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입양이 취소의 사유가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884조 제1호), 미혼부의 실질적인 부모로서의 역할에 비교하여, 입양 당사자들의 신분관계에 지나치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새로 도입된 친양자 제도에 의하면 친생부모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15세 미만의 자를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가 혼인하여 그 배우자가 미혼모의 자를 친양자로 입양할 것을 결심한 경우, 미혼부가 실질적으로 자의 양육에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에 의하여 역시 친생부모로서 친양자 입양 시 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또한, 임의 인지에 아무런 시기적 제한이나 일정한 요건을 부가하고 있지 않은 현행법의 원칙에 의하면, 입양 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임의인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인지한 미혼부는 친생부모로서 자신의 자에 대한 친양자 입양의 동의를 할 수 있다. 이것은 언급한 바와 같이, 미혼부의 부로서의 실질적 역할에 비추어 부당한 정도의 신분관계 개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 진다.

친양자 제도는 기존의 민법상의 보통양자제도가 입양 이후에도 친부모와의 친생자 관계가 그대로 유지될 뿐 아니라 양자의 성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과, 점차 재혼가정이 증가하는 추세에 비추어 재혼가정에서 夫가 처의 자를 입양하더라도 아버지의 성과 아이의 성이 다르게 된다는 점이 양자될 자의 이익에 반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완전양자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민법의 친양자 제도의 이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친생부의 동의권은 형식적인 인지 여부에 의해서만 인정해서는 아니 될 것으로 생각되며, 인지와 함께 법률상 친자관계에 따른 친생부로서 실질적 역할이 존재했을 경우에 한하여 친양자 입양의 동의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 강제인지 청구권

부 또는 모가 자신의 자를 임의로 인지하지 않을 경우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63조). 이에 의하여 혼인 외 출생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인 미혼모가 미혼부를 상대로 강제인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출생자가 혼인 중 친생추정을 받고 있는 경우 (제844조), 자신의 친생부를 알고 있는 경우에도 법률상의 부 또는 모가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 부성을 부인하는 소가 확정된 이후 비로소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다.

인지청구권은 본인의 일신 전속적인 신분관계상의 권리로서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으로 인지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화해가 재판상 이루어 졌고 그것이 화해조항에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¹⁴⁾. 또한 인지청구권의 포기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실효의 법리 또한 적용되지 않는다¹⁵⁾.

강제인지청구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미혼모가 임신한 이후 미혼부와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미혼부와 출생한 자녀의 친자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강제인지 제도가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미혼모 개인의 문제로 귀속시켜 버리는 경우 경제적으로 열악한 미혼모가 소송을 수행하여 강제인지를 관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하기 어렵다. 특히 미혼모의 연령이 10대인 경우 미성년자로서 소송능력이 없으므로, 이들의 부 또는 모가 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10대 미혼모의 경우 본인이 이미 가출 상태에 있거나, 원 가정으로 부터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하여 보로부터 소송 수행 등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낮다.

결국 민법의 강제인지 절차에 의하여 친자관계를 확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것이 미혼모의 문제가 항상 미혼모 개인의 문제로 귀결되고 미혼부의 책임이 방임되는 구조의 특징이라고 보여 진다. 따라서 미혼부에게도 출생에 대한 책임을 귀속시키고 이를 현실적으로 관철하기 위해서는 인지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주체를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한부모가족지원법 부분에서 후술함).

2. 미혼모의 친권과 입양동의권

1) 미성년 미혼모의 자녀에 대한 친권과 입양동의권

친권은 자에 신분에 대한 권리와 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대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민법 제913조 내지 916조). 따라서 친권자는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¹⁶⁾. 이

14) 대법원 1987. 1. 20. 85므70.

15) 대법원 2001. 11. 27. 2001므1353.

러한 입장에서는 혼인에 의하여 미성년자가 성년의제된 경우를 제외하고 행위능력을 보유하지 않는 미혼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가 친권을 보유할 수 있는지 의문시 된다. 미성년 미혼모의 친권행사에 대해 민법은 친권자는 그 친권에 따르는 자에 갈음하여 그 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910조).

이 규정에 대해서는 미성년 미혼모의 자녀에 대한 친권은 미성년 미혼모가 가지고 있거나 그 행사를 부모가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또는 미성년 미혼모의 친권자가 출생자에 대한 전적인 친권을 행사하므로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 미혼모 자신은 친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의문시 된다.

이와 유사한 문제로 부부의 이혼 시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모의 일방이 혼인 중 보유하고 있던 친권자의 지위에 대해, 친권자의 지위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자동으로 친권이 상실된 것으로 보는 것인지 또는 친권자는 아니지만 잠재적으로 친권자의 지위 (잠재적 친권 행사자)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지 견해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전자의 입장에 의하면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던 자가 사망한 경우 후견이 개시되는 것으로 보며¹⁷⁾, 후자의 입장에서는 다른 일방의 친권이 부활 된다고 본다¹⁸⁾. 판례는 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¹⁹⁾.

민법이 친권자를 지정하는 행위와 친권상실의 개념은 구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민법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친권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924조). 동 조문을 전제할 때, 이혼 등으로 친권자 지정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이 친권을 상실하여 종국적으로 친권 자체가 귀속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²⁰⁾.

친권은 그 본질상 권리 보다는 의무적 속성이 강한 것을 특징으로 하지만, 자를 존재하도록 한 주체로서 친권은 부모의 권리를 구성하기도 한다. 따라서 친권이 자에 대한 재산상의 권리 의무를 행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는 것이 친권자가 반드시 행위능력자 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친권이 자를 존재하도록 한 주체로서 부모의 권리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권리능력이 있다면 친권의 주체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 행사는 행위능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권리의 주체로서 미성년 미혼모는 친권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민법 910조에서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자에 갈음하여 그 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 한다”는 것은 미성년 미혼모의 친권이 동법 제9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을 상실당하거나 스스로 그 행사를 포기

16) 지원립, 민법강의, 홍문사, 2007, 1579면.

17) 김주수 / 김상용, 앞의 책, 361면 ; 이정희, 앞의 책, 229면.

18) 박동섭,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6, 345면.

19) 대법원 1994. 4. 29. 94다1302.

20) 조광훈, 이혼후 단독친권자로 결정된 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한 부모의 친권 행사에 관한 연구, 사법행정, 한국사법행정학회, 제50권 2호, 2009. 2., 33-34면.

한 경우가 아닌 한, 출생자의 친권자가 미성년자 이므로 그 행사만을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대행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법문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 미혼모가 자신의 친생자에 대한 친권을 어떤 형태로도 행사할 수 없고 모든 것을 미성년 미혼모의 친권자가 가지고 있다면, 미성년 미혼모의 친권은 성년이 되기까지 자신의 친생자에 대한 보호·교양의 권리 및 재산관리권 등에서 아무런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규정은 미성년 미혼모의 친생자에 대한 의사 결정과 법적인 친권 행사자인 미혼모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모인 미성년 미혼모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법적인 통로가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소재를 가지고 있다.

특히 민법 제869조는 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그에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 미혼모의 경우 출생한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부모이므로 대략입양의 승낙 또한 미성년 미혼모의 부모가 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만일 동 규정을 이와 같이 해석한다면, 미성년 미혼모의 입장에서 자신이 친생자를 직접 양육하고자 해도 친권 행사자인 그 부모의 의견에 의하여 출생자를 대략입양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2007년 대법원은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29호 (입양의 동의 또는 대략 및 파양의 대략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제정하여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친권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입양을 대략하면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 또는 모의 입양에 대한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입양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입양 대략에 관여하지 못한 부 또는 모가 친권을 상실한 경우가 아닌 한, 입양이 양자를 위하여 적정한 것인지 여부를 감독하게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입양대략의 경우에도 입양신고서에 입양 대략에 관여하지 못한 부 또는 모의 입양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따라서 친권이 상실된 자로 기재된 부 또는 모의 경우를 제외하고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신고서에 부모의 입양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동의 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 직계존속의 입양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29호 입양의 동의 또는 대략 및 파양의 대략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 1항).

또한 민법 제869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15세 미만인 양자가 될 사람에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동 지침 제3조 3항). 따라서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친권자로서 15세 미만인 양자가 될 사람에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한 경우에도 친권자가 아닌 다른 부 또는 모의 입양동의서를 입양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²¹⁾.

21) 이현재, 한국입양법의 문제점, 원광법학, 제23권 2호 (2007.9),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489면, 각주 5) 재인용.

동 예규는 친권을 상실한 것은 아니나 현실적으로 잠재적 친권만을 보유하고 있는 부 또는 모에게 입양절차에서 자신의 부모로서의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동 예규가 미성년 미혼모를 대신하여 미혼모의 15세 미만의 친생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는 미성년 미혼모의 부모가 출생자를 대략입양시키기 위해서 미성년 미혼모의 동의를 요하는지 여부에 적용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즉 동 예규는 미성년 미혼모가 자신의 친생자에 대해 가지는 친권이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 일방만이 친권자가 되고, 친권자가 아닌 나머지 일방의 부 또는 모의 동의를 입양에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여 친권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부모로서의 지위에 근거해 자신의 친생자에 대한 입양 기타 사항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해 일정한 견해를 표방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성년 미혼모가 자신의 친생자에 대하여 부모가 이혼 등의 사유로 일방이 친권을 가지고 있고 다른 일방은 친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미성년 미혼모가 자신의 친생자에 대해 친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부 또는 모의 일방과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미성년 미혼모의 경우 자신의 친생자에 대한 친권을 상실된 것은 아니므로, 동 예규를 적용하여 친권을 대리 행사하는 자신의 부모의 의사만으로 자신의 친생자를 대략입양을 시킬 수 없고 미성년 미혼모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동 예규를 제정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적절할 것이다.

2) 성인미혼모의 친권행사

미혼부의 인지가 없는 한 성인인 미혼모는 출산에 의하여 자녀와의 관계에서 단독으로 친권을 보유한다. 따라서 미혼모는 자에 대한 보호교양권, 거소지정권 및 자의 재산관계에 대한 대리권 등을 행사한다,

단독 친권자로서 미혼모가 자녀의 양육을 포기하고 자녀를 입양시키고자 할 때, 자녀가 15세 미만인 경우 미혼모 단독의 대략으로 입양이 발생한다 (제869조). 자를 인지하고 있지 않은 미혼부는 잠재적 친권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략입양 시 입양신고서에 부모의 입양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동의 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 직계존속의 입양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대법원 예규 (입양의 동의 또는 대략 및 파양의 대략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 1항)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본다.

또한 민법은 양자될 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 자녀가 15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 입양의 경우 부모 또는 다른 직계존속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871조). 따라서 미혼부가 인지하고 있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자녀의 父라는 것이 명확한 경우, 15세 이상의 미성년자의 입양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

제될 것이다.

민법은 인지에 대해 “혼인외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 (제855조 1항)고 규정한 이외에 인지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인지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부 또는 생모가 그를 자기의 자로 인정하여 법률상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이해한다²²⁾. 따라서 인지하지 않은 부가 법적인 부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명확하다. 판례는 “혼인 외의 자와 부와의 친생자 관계는 부의 인제에 의하여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혼인 외의 출생자인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친생자로서 신분을 취득하려면 청구인의 인지가 있어야 하고 그 인지가 있었다는 자료가 없는 한 법률상 청구인과 피 청구인 사이의 친생자 관계는 생기지 않는 것이다²³⁾”고 판시하고 있다.

인지하지 않고 있는 부는 그 자와 친생자 관계를 설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상 父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의 입양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될 것이며, 결국 미혼모의 단독의 동의를 요건으로 입양이 발생할 것이다.

3. 자녀의 성 결정의 문제

1) 민법의 개정과 부성원칙주의

2005년 개정 전 민법은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며 성과 본은 어떠한 경우에도 바꿀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경우는 부를 알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 모의 성을 따르게 되는 경우에 낙인을 가하는 구조를 취하였다 (구 민법 제781조 1항 및 2항). 동 규정에 의하여 미혼모의 자녀는 부로부터 인지를 받기 전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며, 후에 미혼부의 인지가 있으면 부성강제주의 원칙에 의하여 자는 다시 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었다.

개정 전 민법의 이러한 입법 방식은 미혼부의 임의인지가 전적으로 부의 일방적인 의사에 일임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동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있었다가도 후에라도 부가 인지하면, 자동적으로 부의 성과 본을 강제적으로 따르게 된다는 점에서 성 불평등한 조문으로 문제 제기 되어 왔다²⁴⁾.

동 규정의 부성강제주의 원칙은 2005년 개정으로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되, 부

22) 송덕수, 신민법강의, 박영사, 2008, 1466면, 인지제도는 주관주의와 객관주의가 있으며, 이 중 전자는 인지자의 의사에 기하여 인지를 허용하는 것으로 임의인지를 법률행위로 이해한다. 반면 객관주의의 입장에서 인지는 자연적인 혈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인지를 허용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인지란 자연적 부자관계 존재 사실에 대한 관념의 통지로 본다. 우리 민법의 인지제도가 주관주의와 객관주의 중 어느 입장에 서 있는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나뉘고 있다.

23) 대법원 1984. 9. 25. 84므73.

24) 이에 대해서는 줄고, 차선자,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의 시각에서 본 가족법, 아시아여성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 여성연구소, 43-1, 149면 이하.

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민법 제781조 1항). 또한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에도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이 성과 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하는 경우, 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민법 제781조 5항). 나아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민법 제781조 6항).

이로서 우리 민법의 부성강제주의는 다소 완화된 부성 원칙주의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부성원칙의 입장을 취하며 예외적으로 부부가 혼인 전 이미 합의한 경우나, 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모의 성을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가 인지하지 않은 경우에 모의 성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개정 전 민법의 입장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개정된 민법 제781조 중 미혼모와 그 자녀에게 의미 있는 것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한 규정(동조 제6항)이다.

특히, 동 규정은 친양자 제도와 함께 미혼모의 자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동 조항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구체적인 요건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자의 복리와 필요성이 모두 성 변경 심판의 전제가 되므로 자의 복리를 위한 경우에 무조건적으로 성 변경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성을 변경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예외적으로 모성 부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와 둘째는 예외적인 부성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 각각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²⁵⁾.

2) 모의 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상황

헌법재판소는 예외적으로 모의 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상황으로 첫째, 출생 직후 자에게 성을 부여할 당시 부가 이미 사망하였거나 부모가 이혼하여 모가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고 양육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둘째, 혼인 외의 자를 부가 인지하였으나 여전히 모가 단독으로 양육하고 있는 경우 등을 들고 있다. 이 중 두 번째 사례는 원칙적으로 부의 인지 이후에도 종전의 모의 성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민법 제781조 5항이 신설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필요성은 그대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인지한 미혼 부가 사망하는 경우 첫 번째 사례에 해당하게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

25) 이현재, 자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에 있어서 자의 복리, 가족법연구, 한국가족법학회, 제22권 2호, 2008, 29면 이하 참조.

는 모의 성으로의 변경을 인정할 만한 총체적 상황으로 “생활관계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부 또는 부계 혈연집단과의 유대나 교류를 전혀 기대할 수 없고 부성의 사용이 단순히 생부의 성을 확인하게 하는 기능 이외에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는 반면, 모의 양육에 의하여 모와 함께 생활하면서 모계 혈연집단을 중심으로 생활관계를 형성할 것이 명확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통상적인 가족관계에서 추상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던 성의 사용 문제가 부성의 사용에 대해서는 그 이익이 거의 없어졌음에 반해 모성의 사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익으로 나타나는 상황이 되었다²⁶⁾”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혼부가 일단 인지하여 출생자가 부의 성을 따르게 되더라도, 후일 실질적 양육 관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미혼부의 가족과 출생자 간의 가족관계로서의 교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당초에 인지한 미혼부와 모가 모의 성을 따르기로 하는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후에 모의 성으로 변경이 가능할 것이다.

3) 계부의 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미혼의 모가 자와 함께 혼인을 할 경우 자의 성을 계부의 성으로 변경할 필요가 발생한다. 만일 자의 연령이 15세 미만이고 출생자의 모가 혼인한 夫와 1년 이상 혼인중이며, 夫가 그 자를 입양하고자 할 경우 이는 개정민법의 친양자 입양에 의하게 된다 (제908조의2). 이 경우 친양자는 원칙적으로 부부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간주 된다 (제908조의 3). 따라서 부부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 다른 일방과의 사이에 친자관계가 개시된다. 이에 의하여 모의 친생자는 입양과 함께 계부가 친생부로 되므로, 그의 성과 본은 제781조 1항의 원칙에 의하여 혼인당시 모와 부가 출생자가 모의 성을 따르기로 특별히 합의한 바 없는 경우 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된다.

미혼의 모가 15세 이상의 자를 데리고 혼인하는 경우, 친양자 입양의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 이 경우 모의 배우자가 자와 친자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보통입양에 의하게 된다. 우리 민법의 보통 입양은 계약형 양자법으로 피입양자 (양자)와 입양부모 (양친) 사이의 사적인 신분계약이다. 보통 입양제도를 이용하여 양친자 관계를 설정하는 경우, 현행 민법상 양자가 양친의 성을 따르는 것은 불가능하다²⁷⁾.

그러나 민법의 개정으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의 성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제781조 6항), 동조에 의하여 양친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는 우회적

26) 현재 2005. 12. 22. 2003헌가5·6 (병합).

27) 이는 보통입양의 경우, 종래 이성양자의 성 변경에 관하여, 개정 전 민법 제781조 제1항의 “자는 부의 성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한다”는 규정에 있어서 자(子)를 자연혈족으로서의 친생자만을 의미하고, 법정혈족으로서의 양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축소해석되어 왔기 때문이다, 김영규, 우리 민법상의 부성주의, 법학연구, 한국법학회, 제25집, 2007, 181면.

인 방법이 생기게 되었다. 동조에 의하여 성과 본의 변경은 부, 모 또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자가 성년인 경우 스스로 성과 본을 모와 혼인한 양부의 성으로 변경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자가 15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 부 또는 모의 청구로 성 변경이 가능하다. 여기서 자의 성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부모가 누구인가 문제된다. 동조에서 의미하는 부모에는 양친 또는 양모도 포함된다고 할 것 이다. 따라서 양부의 성으로의 변경은 물론이며 양모의 성으로의 변경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²⁸⁾. 따라서 미혼모가 15세 이상인 미성년의 자를 데리고 혼인한 경우, 친생모, 양부 모두 자의 성을 계부인 양친의 성으로 변경신청할 수 있다.

4. 부양청구권

1) 미혼모와 출생자의 사적부양체계

민법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에 그리고 생계를 함께 하는 기타 친족간에 부양의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제974조). 그러나 동 규정은 2차적 부양의무로 친족간의 부양에 관한 것이며, 부부간의 부양은 동 규정에서 근거하지 않고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규정한 제826조 제1항에서 찾고 있다. 민법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에 대해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자녀에 대한 보호와 교양의 의무를 규정한 제913조²⁹⁾ 및 직계혈족간의 부양의무를 규정한 제974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미혼모가 양육을 결심할 경우, 미혼모와 미혼부는 자에 대한 공동의 양육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그러나 위의 미혼모에 대한 현황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미혼모와 미혼부는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미혼모의 연령층이 점차 저연령화 되고 있다는 것과 대비하여 미혼부도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혼모가 양육을 결심하는 경우 대개는 미혼부와 공동으로 양육의 책임을 부담하기 보다는 단독으로 양육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미혼모와 미혼부가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 있으므로 부부로서의 부양의무에 관한 민법 제826조 제1항은 적용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물론 미혼모와 미혼부가 사실상의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 사실혼 배우자로서 부양의 의무를 상호 부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법은 사실혼을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뿐 아니라 당사자의 혼인의사가 존재할 것을 요구하며 사실혼과 동거를 구별하고 있다. 따라서 미혼모와 미혼부가 사실상의 생활

28) 이현재, 자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에 있어서 자의 복리, 가족법연구, 한국가족법학회, 제22권 2호, 2008, 36면.

29) 지원립, 민법강의, 박영사, 2007, 1597면.

공동체를 형성하고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에도 항상 사실혼으로 인정되어 상호 부양 의무가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혼에 대한 민법의 이러한 입장은 주관적인 혼인의사의 유무를 사실혼 성립의 요건으로 전제하는 것에 기인한다.

가족은 다양한 기능을 가지는 집단이며, 이들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인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경제공동체로서 가족의 기능을 고려한다면, 당사자의 주관적 혼인의사의 유무와 관계없이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으며 생계를 함께하고 자녀 양육을 공유한다면, 이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민법이 사실혼의 개념을 이와 같이 객관적인 공동생활의 실체를 가지고 규정할 때, 비로소 당사자의 혼인 의사의 유무에 관계 없이 객관적인 실체가 있는 경우 미혼모와 미혼부는 상호 부양의 의무를 귀속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미혼모와 미혼부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단독 양육을 결정하는 경우 미혼모에 대한 부양은 미혼모의 원 가족과의 문제로 전환될 것이다. 물론 미혼모가 미성년자인 경우, 언급한 바와 같이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은 친권자인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귀속될 것이다(제913조 및 제974조). 그러나 미성년 미혼모의 경우 원가족과의 단절된 경우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사적부양체계에 의하여 미성년 미혼모의 부양이 이루어 질 것을 기대하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생각된다.

또한 미성년 미혼모의 출생자에 대한 부양은 현행 민법의 체계에 의하면 스스로 친권자의 부양의 대상인 미성년 미혼모가 자신의 출생자를 보호 교양하여 부양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직계혈족간의 부양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974조에 의하여 미성년 미혼모의 친권자가 출생자에 대한 2차적 부양의 의무가 귀속되게 될 것이다.

미성년 미혼모에 대한 친권자의 부양의무나 그 출생자에 대한 직계혈족으로서의 부양의무나 어떤 경우든 현실적으로 원 가족과의 분리로 인하여 사적부양체계에 의하여 부양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부양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을 거부하는 경우, 부양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체가 미성년자인 경우 단독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없는 미성년자가 자신의 친권자를 대상으로 사적부양에 대한 권리를 관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다.

미혼모가 성년이 경우 민법상의 부양의무가 더 이상 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명확하지 않은 것은 우리 민법이 성년의 자녀에 대한 부양의 의무를 인정하느냐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최근 우리 사회는 이미 20세 이상의 성년의 자녀라 할지라도 학업 중에 있는 자녀는 부모의 부양을 받는 것이 보편화 되어 있다. 하급심에서는³⁰⁾ “일반적으로 이혼자인 부모가 그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의 하나로서 지게 되는 양육책임은 자녀가 성년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고 할 것이나, 부부가 이혼하면서 자녀들의 양육을 모가 맡아서 하되 부가 자녀들의 취업 또는 결혼 시까지 양육비와 생활비를 지급하기

30) 서울민사지법 1993.2.4. 선고 92가합44812.

로 약정하였다면 자녀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취업 내지 결혼하기 전까지는 양육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는 판례가 있다.

그러나 민법은 친족간의 부양의무에 의하여 부양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 의무를 귀속시키고 있다 (제975조). 성년 미혼모일지라도 자녀를 단독으로 직접 양육할 것을 결정한 미혼모는 근로에 의하여 단독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친족간의 부양청구는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적 부양 체계에서 단독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의 부양문제는 부양의 능력이 있는 미혼모의 부모가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부적하다고 본다. 또한 미혼모의 실태조사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미성년 미혼모의 대다수가 이미 원가족과 분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적부양체계에 의해 이들을 지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적다. 따라서 공적지원체계에 의하여 미혼모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미혼모가 직접양육 여부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이하 후술함)

IV. 입양의 실태와 입양법의 문제

1. 현행 입양법의 체계

우리나라의 입양제도는 크게 3가지의 범주로 구별된다. 구체적으로, 민법 제866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통양자, 2005년 민법개정에 의하여 새로이 도입된 친양자 (민법 제908조의 2 이하에서 규정함) 및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입양촉진특례법으로 칭함)에서 규정하는 입양 방식이다.

3가지의 제도는 각각의 목적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먼저 보통양자의 경우 입양은 양친자 관계를 창설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서 성립되는 것으로 이는 양친되는 자가 성년 자이어야 한다는 것 (민법 제866조)과 배우자 있는 자가 입양을 하려면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한다는 것 이외에 특별한 제한 요건을 두고 있지는 않다. 다만 양자될 자의 연령을 3단계로 구별하여 15세 미만인 경우, 15세 이상 20세 미만, 20세 이상 성년인 경우로 나누어 각각 법정대리인 또는 친생부모의 동의를 요구할 뿐이다. 자유로운 당사자 합의에 의한 입양이며,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양자를 부양할 재산능력 기타 등등을 검증하는 체계가 없으며 당사자의 결정에 의하여 입양계약이 될 수 있으며, 파양도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다. 즉 민법 제905조는 재판상 파양의 사유를 1. 가족의 명예를 오독하거나 재산을 경도한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2. 다른 일방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3. 자기의 직계존속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4.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할 때로 구체적인 사유를 규정하면서도 제5호에서 “기타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여 광범위한 파양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입양방법은 여전히 비밀입양 방식이 지배적이며, 아동을 법적으로 양자로 남지 않도록 입양부모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대법원과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의하면 2004년 민법상의 입양이 2,562명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이 1,641명, 2005년 민법에 의한 입양은 3,154명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은 1,461명 이었고, 2006년 민법에 의한 입양은 3,890명이던 것이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이 1,332명으로 나타나 여히 민법에 의한 입양을 채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 수치는 출생신고 방식으로 입양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이므로 민법에 의한 입양은 더욱 수치가 많을 것으로 추정 된다³¹⁾. 이러한 점으로 인하여 민법은 친양자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다.

반면에 친양자 제도는 자녀를 두고 이혼한 부부가 다시 재혼하는 경우 전혼관계의 자녀를 재혼가정으로 수용하여 새로운 단일 가정의 외관을 형성하고 이로 인하여 아동이 받게 되는 사회적 차별 등을 제어하는 것과 혈연에 의한 가족과 아무런 차이를 남기지 않도록 하는 완전한 양자 제도를 구성하여 아동의 복리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따라서 1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가 배우자의 15세 미만의 자를 친양자로 입양하게 되면 이는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 (제908조의 2 제1항 및 제908조의 3 제1항). 완전양자 제도의 특징으로 친양자로 입양되기 이전의 친족관계는 완전히 단절된다 (제908조의 3 제2항). 따라서 파양의 요건도 보통 양자에 비하여 제한적이어서 1.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의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2.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 행위로 인하여 친양자 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 만을 파양사유로 인정하며 보통양자에서 인정되던 파양사유는 친양자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미혼모와 미혼 부 및 출생자의 신분관계와 관련하여 현행 민법상 보통입양제도와 친양자 입양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은 언급하였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아동권리협약의 입양관련 조항과 헤이그 협약을 기준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입양제도의 문제점을 입양촉진특례법과 관련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2. 입양에 대한 국제협약의 입장

1) 아동권리협약

1989년 UN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아동권리협약은 가장 대표적인 국제협약으로 우리나라는 1990년 서명하고 1991년 이후 효력이 발휘되어 국내법과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 동

31) 허남순, 입양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 3면.

협약은 입양에 대해 다음과 같은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체약국이 아동권리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근 적절한 입법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당사국은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의 태두리 내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제4조),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외에는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9조 3항)³²⁾.

체약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어린이·청소년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해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제12조 1). 입양제도를 인정하거나 허용하는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제21조), 아동의 입양이 적용 가능한 법률과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적절하고 신빙성 있는 모든 정보에 기초하여 부모·친척·후견인에 대한 아동의 신분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음을, 그리고 요구되는 경우 관계자들이 필요한 협의에 의하여 입양에 대한 분별 있는 승낙을 하였음을 관계 당국에 의하여만 허가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21조 a). 국제입양은 관계되는 아동이 국내 입양의 경우와 대등한 보호와 기준을 향유하도록 보장하고 (제21조 c), 국제 입양에 있어서 양육 지정이 관계자들에게 부당한 재정적 이익을 주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제21조 d), 아동의 타국 내 양육 지정이 관계 당국이나 기관에 의하여 실시될 것을 확보 한다 (제21조 e).

이상과 관련 2000년 5월 1일 아동권리협약 이행 실태에 대한 한국의 2차 보고서에 대하여 2003년 1월 UN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의 입양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 한국은 입양에 대해 부정적인 문화전통이 압도적이어서 국내 입양이 당국의 허가 없이 주선될 수 있고,
- 입양주선에 있어서 해당 어린이의 의사나 어린이의 최상의 이익이 반드시 고려되는 것이 아니며,
- 해외입양이 여전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려하고,
- 국제입양에 관한 1993 헤이그 협약을 비준하고 있지 않은 점에 유감을 표명하고,
- 아동권리협약의 원칙과 조항, 특히 제21조에 완전히 부합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국내외 입양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 1993년 헤이그 협약의 비준을 촉구 한다³³⁾.

32) 동조는 비준을 유보하고 있다.

33) 장복희, 국제입양에 관한 헤이그 협약과 국내입양법의 개선, 저스티스, 한국법학원, 통권 93호, 2006. 8. 229면.

아동권리협약의 입양관련 조항에 비추어 아동의 입양은 가능한 한 관계 당국에 의해서만 허용되어야 하며, 관계당국은 아동이 불법적인 유기로 고아나 미아가 되지 않도록 관련법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권리협약 제12조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입양 시 12세 이상의 아동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12세 미만의 아동도 적절한 방식으로 아동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점에서는 민법이 15세 미만의 아동입양의 대략입양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즉 12세 미만의 아동의 입양에 대해서도 의견을 듣도록 규정해야 한다³⁴⁾.

2) 헤이그 협약과 국내입양법의 검토

국제입양은 처음에는 전쟁 중 집을 잃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도적 대안으로 고려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입양할 아이가 없는 국가에서 자녀가 없는 부부, 특히 유럽과 미국에서 행해지는 것이 되었다. 이와 관련 입양시 친부모의 동의문제, 문서의 위조, 입양비용의 지불, 입양부모의 부적합성, 입양의 불인정, 파양 등의 문제가 생기자 이를 해결하고 체약국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채택되었다. 동 협약은 준거법이나 재판관할권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국제입양에 관한 일반규정을 마련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헤이그 협약의 목적은 1. 국제입양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고 또한 국제법상 인정된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의 마련과 (제1조 a), 2. 그러한 안전장치가 준수되고 아동유괴, 아동의 인신매매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체약국간의 협력체계를 수립하고 (제1조 b), 3. 체약국간에 있어서 협약의 규정에 따른 입양의 승인을 확보하는 일이다 (제1조 c)³⁵⁾.

헤이그 협약은 협약 체약국에서 다른 체약국으로 이동하는 아동의 입양과 영구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창설하는 입양에만 적용 된다 (제2조 1항 2항). 이는 구체적으로 다음의 경우이다.

입양아동의 출신국은 1. 아동이 입양이 가능한지 2. 출신국에서 아동의 입양 알선의 가능성에 대하여 정당한 고려가 있어야 하고 3. 국제입양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4. 상담 후 입양에 필요한 동의가 자유롭게 이루어졌는지 결정한다 (제4조). 아동의 입양동의서는 요식행위로 표현되고 당해인, 기구 또는 당국이 요구하는 법적 형식에 따라서 명시적으로 또는 서면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제4조 c (2)).

입양아동 수용국은 1. 장래의 입양부모가 자격이 있는지 결정하고, 2. 장래의 입양부모가 필요한 조언을 듣도록 하고 3. 아동이 그 국가에 입국하고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것이 허용되는지를 결정한다 (제5조).

체약국은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위한 중앙기구를 지정한다 (제6조 1항)³⁶⁾.

34) 장복희, 위의 글, 233면.

35) 장복희, 위의 글, 226면.

3) 입양에 대한 국제법규와 입양촉진특례법

헤이그 협약을 국내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입양촉진특례법의 다음의 사항에 대한 개정 및 검토가 요구된다.

- ① 우리나라의 입양은 공식적인 중앙기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입양을 관할할 수 있는 중앙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일차로 요구된다.
- ② 동 협약에 의하면 국제입양 대상 아동의 범위는 요보호아동만이 아니라 일반아동도 포함된다 (동법 WPOO조). 따라서 요보호 아동만이 아니라 18세 미만의 모든 청소년의 국제입양도 포함되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18세 미만 아동의 입양은 허가제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³⁷⁾. 친척에 의한 입양을 제외한 모든 입양은 입양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며 입양기관 의한 가정조사를 법원이 신뢰하고 그 조사에 근거하여 허가하는 형태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 ③ 미혼모의 출산 후 국제 입양을 결정할 경우 그 절차에 관한 부분에서 모성으로서의 권리를 어느 정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출산 후 모는 적어도 72시간이 지난 후에 아동 입양 동의서에 서명하여야 법적으로 유효하도록 하며, 입양동의서의 서명 후에도 30일 내에 친생부모는 동의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아동이 이미 입양되었어도 30일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입양동의를 취소한 친생부모는 입양취소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³⁸⁾.
- ④ 국내입양을 원칙적으로 우선시하며 국내입양이 되지 않는 경우 국제입양을 보내는 것을 명시하도록 한다. 그리고 입양대상 아동의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와 입양부모로 허가된 경우 입양부모의 인적사항 등을 DB화 하도록 한다.
- ⑤ 아동이 만 18세가 된 이후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 제공을 원할 경우 중앙입양기관은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이 요구된다.
- ⑥ 파양은 가정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하도록 하고 아동의 입장을 대변할 사회복지사와 법률 전문가가 참석해야 하며, 파양의 요건 및 시기를 엄격히 제한하여야 한다.
- ⑦ 아동의 입양동의 연령을 현재 만15세에서 만10세로 하향조정하도록 한다.
- ⑧ 입양부모 가정조사 시 입양부모의 범죄기록, 아동학대, 성적학대 등에 대한 기록을 조서에 포함하도록 한다³⁹⁾.

36) 장복희, 위의 글, 227면.

37) 허남순, 8면.

38) 허남순, 앞의 연구보고서, 9면.

39) 허남순, 위의 연구보고서, 9면-10면.

V. 미혼모의 지원을 위한 복지관련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미혼모의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미혼모가 구체적인 수혜대상임을 언급하지는 않으나, 미혼모 및 그 자녀가 생활능력이 없을 경우 그 보호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함으로써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법 제1조). 따라서 미혼모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미혼모는 일시적으로 생계보호대상자로 인정되며, 자활보호를 위해 미혼모가 분만할 때 조산 및 분만 전후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분만 후 일정기간 생계보호를 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이 있다. 하지만 미혼모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급여는 미혼모 시설에서 출산을 위해 거주하는 동안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와 의료보호를 통한 의료급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미혼모시설 및 양육모를 위한 그룹홈에서 자립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인성교육 및 양육교육과 함께 직업교육을 시설 내·외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활급여와는 차이가 있다⁴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독으로 양육을 결정한 미혼부모가 처한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단독 양육을 결정하는 미혼모의 경우 원 가족과의 갈등이 심각하여 시설 퇴소 후 거주할 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이며, 미혼모의 부모가 미혼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혼모는 자신의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출생자와 생활하여야 하는 현실을 당면한다. 이러한 극한 상황에서 미혼모가 양육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경제적인 최소한의 지원이다.

그러나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그 수급 자격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로 조건을 제한하고 있다 (동법 제5조 제1항).

동법에서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미혼모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혼모의 부모가 부양의무자가 된다. 또한 동법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수급권자가 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 (동법 제5조 1항).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란 1. 수급자인 경우, 2.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40) 김유경 / 조애저 / 노충래, 위의 연구보고서, 105면.

해당하는 자로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4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미만인 경우, 가. 동법 대통령령 제3조의 근로, 사업, 재산, 기타소득에 따른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미만인 자, 나. 일용근로 등에 종사하는 자, 이 경우 일용근로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는 근로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월 미만인 근로로 한다. 4. 제1호 내지 3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 실제소득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130 미만일 것, 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4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미만일 것, 다.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할 것, 5. 기타 질병·교육·가구특성 등으로 인하여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1항)가 해당된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1.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2.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3. 동법 제2조 2항 제3호 내지 6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구체적으로 다음을 가리킨다.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 등에 의한 교도소·구치소·치료감호시설등에 수용중인 자, 4.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정신보건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5. 실종선고의 절차가 진행중인 자,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의 사유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되어 1월이 경과되었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하는 자), 4. 부양을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 5. 기타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그러나 이 중 원 가족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미혼모가 개별적으로 출생자를 독립 양육한다는 사실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가 되는 것은 언급한 요건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요원하다.

언급한 것처럼, 민법은 성인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결과적으로 당장에 양육을 부담하게 되는 미혼모가 자신의 자력과 근로에 의해 생활 유지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미혼모의 부모가 실질적 부양을 부담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되어도, 민사부양의 한계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혼모는 민사법적인 부양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또는 위에서 언급한 요건들을 충족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요건을 갖추는 것은 어렵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동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동법에 따른 자격요건 부합여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를 개별가구로 전제하고 있으며 (동법 제2조 7호), 개인별 단

위로 수급권자의 지위를 확인 받는 것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미혼모는 원 가족과의 단절을 경험함으로써, 가족을 단위로 설정되어 있는 현행 복지체계에서도 누락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민사부양과 저소득가정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의 혈족단위 또는 가족단위의 구성은 양자의 틀 속에서 미혼모와 그 자녀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각지대의 극복을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가족단위의 구조에서 개인단위의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수급자의 요건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 국한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양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2.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외에 미혼모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다. 이는 1989년 제정된 [모자복지법]을 출발으로 2002년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되어 시행되다가 2007년 다시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 시행하게 되었다. 동법에 의하여 미혼부모는 한부모 가족으로 일정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 미혼모 가족의 복지급여

(1) 복지급여의 신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에 기하여 동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동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라 함은 배우자와 가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은 미혼자 등으로 아동을 양육하는 모자 또는 부자 가족을 의미한다 (동법 제4조 제1호 내지 7호 및 제5조). 따라서 미혼모가 사실혼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 동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복지급여를 스스로 신청할 수 있다.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복지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친족 이외에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종사자, 보호대상자의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 등이 그 해당자이다⁴¹⁾. 동법에 의한 복지급여 대상자의 보호기간은 1년으로 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 제4조 1항).

41) 보건복지가족부, 2009년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2009. 23면.

(2) 복지급여의 내용

① 자녀학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으로 선정된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의 학습에 참가하는 자에 대한 학비가 지원된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인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교육보호를 적용한다.

②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0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인당 50,000을 지원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변경되거나 동법에 기하여 생계비 지급을 받은 경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중단된다.

2) 자녀양육비 이행 확보 무료법률구조사업

미혼모 출산의 경우 미혼부의 책임 소재의 문제는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다. 민법은 부의 임의 인지가 없는 경우 모에게 강제인지 청구권 및 이를 통하여 자에 대한 미혼부의 강제인지가 있으면 부로서 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귀속시키게 된다. 그러나 미혼모 단독으로 미혼부를 상대로 강제인지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미혼모의 경제적 열악함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건강가정기본법 제31조는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동규정에 근거하여 한부모 가족의 자녀양육비 확보를 위한 법률상담, 소송서류작성, 소송대리 등 종합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아동의 양육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미혼모자 가정의 경우 먼저, 미혼부를 대상으로 하는 자녀인지청구소송이 수행되어야 하며, 그에 의하여 부자관계 확정이 되면 이후 자녀양육비청구소송 및 자녀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적 절차가 지원된다. 이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수행한다⁴²⁾.

3) 주거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8조는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경우 한부모 가족에게 일정 비율이 우선 분양 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42) 보건복지부, 2009년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68면 이하.

4) 미혼모의 복지자금 대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혼모의 보지 급여 이외에도 복지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구체적인 자금대여의 대상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동법 제13조).

대상자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으로서 근로능력 및 자립자할 의지가 뚜렷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자에게 지원 한다. 창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09년도 현재 무보증 대출의 경우 가구당 1,200만원 이하, 보증대출의 경우 가구당 2,000만원 이하, 담보대출의 경우 가구당 2,000만원 이하를 지원받고 상환은 5년 거치 및 5년 상환으로 고정금리 3.0%의 조건으로 대여하고 있다⁴³⁾.

5) 미혼모 지원 시설

미혼모만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는 미혼모자시설,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미혼모공동생활가정 등을 들 수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1항, 제5호, 제6호 및 제9호).

미혼모자시설은 미혼 여성의 임신·출산 시 안전 분만 및 심신의 건강 회복과 출산 후 아동의 양육 지원을 위하여 일정 기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의미 한다 (동법 제19조 제1항 제5호).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은 출산 후의 미혼모와 해당 아동으로 구성된 미혼모자 가족이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며 (동법 제19조 제1항 제6호), 미혼모공동생활가정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들이 일정 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동법 제19조 제1항 제9호).

미혼모자 시설은 1991년 10개소, 2000년 8개소, 2003년 10개소, 2005년 18개소로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27개소에 달하며 공동생활가정은 2003년 5개소가 문을 연 이래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 현재 21개소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19개소, 미혼모공동생활가정 2개소)이다. 그 결과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90년대 1000여명에 불과한 것이 현재는 연 2000명을 상회하고 있다⁴⁴⁾.

미혼모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나, 미혼부모도 이용이 가능한 보호시설로는 모자(부자) 보호시설이 있다. 이는 생활이 어려운 모자 또는 부자가정을 일시 또는 일정기간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 후 자립기반을 조성할 목적으로 마련된 지원시설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1항 제1호 및 제3호). 이 시설의 입소 대상은 미혼모뿐 아니라 사별이

43) 보건복지부, 2009년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63면 이하.

44) 김혜영, 미혼모 정책 어디로 가야 하는가?, 제47차 여성정책 포럼 미혼모를 둘러싼 현황과 쟁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3면.

나 이혼 등으로 세대주인 모와 18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저소득층 가정으로 무주택자 이어야 한다. 거주기간은 3년으로 2년 연장 가능하다. 모자가정은 이 시설에 거주하는 동안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되어 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직업 훈련 등을 지원받는다. 퇴소 시에는 정착금으로 200만원이 지급된다⁴⁵⁾.

모자 (부자)자립시설은 만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모자 또는 부자가정세대가 모자 (부자) 보호시설에서 퇴소하였지만 자립준비가 미흡한 가정을 대상으로 자립을 도모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시설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6) 의료지원

미혼모보호시설 입소자들은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인정된 경우 의료급여의 수급자의 지위도 겸한다. 이에 의하여 미혼모들을 위한 의료보호는 지역 내의 병원 및 보건소 등에서 산전, 분만, 산후에 필요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상분만 등과 같이 의료급여를 적용할 수 없는 부분에 한하여 미혼모 특수 치료비를 지급받는다.

또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아동의 경우 18세 미만까지 의료급여의 수급권자가 된다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4호) 그러나 양육모를 위한 의료보호에 대하여는 뚜렷하게 명시된 것이 없다. 특히 양육모가 2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면서 아동건강 및 발달, 그리고 질병예방에 필수적인 예방접종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양육모 및 그 영유아를 위한 의료보호는 매우 중요한 지원이라 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지원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⁴⁶⁾.

7) 교육 및 훈련지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선정되면, 교육급여의 일환으로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보조 받고,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취업알선, 훈련, 공공근로 등에 참가할 수 있다. 미혼모와 양육모에게 특별히 제공되는 직업교육이나 훈련으로는 자립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컴퓨터, 기계자수, 홈패션, 양재, 미용 등과 인성 교육 및 상담, 취업훈련 및 직업알선을 제공받고 있다.

미혼모와 양육모는 임신자체로 교육기회를 박탈당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혼모나 양육모가 「한부모가족지원법」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의도하는 바와 같이 경제적인 자립 및 자활을 통해 독자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적절한 직

45) 김유경 / 조애저 / 노충래, 앞의 연구보고서, 107면.

46) 김유경 / 조애저 / 노충래, 앞의 연구보고서, 108면.

업기술과 능력을 보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미혼모와 양육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기회의 제공은 이러한 직업기술과 능력을 보유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에 중·고등학교 및 동등학력 이상의 교육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미혼모 및 양육모, 특히 10대 미혼모가 중·고등학교를 마칠 수 있는 교육적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다. 즉, 임신 중에도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공교육이나 대안(중·고등)학교는 전무한 형편이다.

또한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및 취업준비 프로그램도 고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노동집약적이면서 매우 제한된 소득만을 보장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되어 있다. 나아가 미혼모 및 양육모들의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한 직업훈련 및 취업준비 프로그램도 매우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⁴⁷⁾.

VI. 결론

우리 사회에서 미혼모의 출산이 가족유형의 다양화로 인식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의문은 우리가 여전히 가족을 정의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지 못하다는 데서 다시 파생하는 물음일 것이다. 미혼 여성의 출산을 계약을 매개로 하는 현행 법률혼을 중심으로 검토할 경우 그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유형의 미혼의 출산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들을 들어낼 수 없는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미혼모 가족이 진정으로 변화하는 한국 가족의 한 유형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언급한 바와 같이 신분법적인 차원에서 파생하는 미혼모·부 및 자녀와의 관계의 확정과 그로 인한 자녀의 부양에 대한 부와 모로서의 역할의 공유가 부와 모에게 평등하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첫째, 미혼모가 출산한 자녀에 대한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강제인지 제도를 활성화 하고 이를 위하여 미혼모 스스로가 소송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여건 등으로 불가능 한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공적체계를 보편적 권리로 접근이 쉽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강제인지제도를 통하여 미혼모가 출산한 자녀의 부성을 확정하는 어려움에 비교하여, 임의인지 제도는 친생부에게 지나치도록 편의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임의인지를 할 수 있는 구체적 요건으로 미혼모의 자녀의 출생 시 부로서 자녀의 출산과 양육 과정에 일정한 기여를 한 경우에 한하여 임의 인지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식으로 임의인지 관련 규정을 재구성 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셋째, 현행 민법은 자녀가 입양되는 과정에서 부모의 동의를 광범위하게 구하고 있다. 물론 자녀가 출생하게 된 친생부모에게 이와 같은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일면 타당하다. 그러나 부모에게 친권이 있든지 없든지 직접적 양육친으로서 또는 비양육친으로서 자녀 양육에

47) 김유경 / 조애저 / 노충래, 앞의 연구보고서, 109면.

일정한 부분의 책임을 부담한 경우에 자녀의 입양에 대한 동의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친양자 제도의 도입으로 15세 미만의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친양자 될 자의 친생부모가 동의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되 다만 친권이 상실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로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친양자는 일단 입양이 결정되면 입양한 부부의 혼인 중 친생자로 보게 되므로 미혼모가 단독으로 양육하다가 제3자와 혼인하여 그 자를 친양자로 입양하고자 할 경우, 그 자의 출생이후 양육의 역할을 하지 않은 친생부는 동의권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친양자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신분관계에서 파생하는 법리를 이와 같이 재정립 하고도 남는 문제는 미혼부와 미혼모 양자 모두가 자녀의 양육 책임을 포기하는 경우 아동입양의 문제 이다. 우리 민법의 보통입양제도는 입양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입양을 구성하고 있으며, 원 가족과 관계의 단절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분적인 신분변화의 효과만을 가지게 된다. 새로이 도입된 친양자 제도는 배우자 일방의 친생자를 입양하는 경우 입양한 부 또는 모는 입양아와 친생부모 관계를 형성하도록 한다는 점이 특징이나, 미혼모가 그 출생자와 함께 혼인을 하는 경우 미혼모의 자녀는 자신의 친생모와의 관계를 통하여 새로운 가정에 편입되는 형태이므로 이 또한 일반적인 입양의 경우와는 다소의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미혼부와 모가 모두 양육을 포기하는 경우 발생하는 입양은 입양아의 미혼 부 또는 모와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새로운 가정에 미혼모의 출생자가 입양되는 경우이다. 혈통에 의한 가족 구성을 무엇보다 정상가족의 이데올로기화 하여 강조해온 우리나라는 여전히 국내입양이 저조한 현실에서 이러한 형태의 입양은 국외입양이 가장 다수를 차지해 왔다. 국외입양이 가지는 문제는 여전히 현존하는 것이며 아직도 우리나라는 헤이그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이의 비준과 함께 입양법 전체를 통일화 하고 재구성하는 법적인 개정이 이루어져야 혈통중심의 우리가족의 구조가 좀 더 가족구성원의 의식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가족을 받아들이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미혼부의 인지 및 양육의 동참 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자신의 자를 양육하고자 하는 미혼모의 경우,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실질적 양육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이 필수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저 연령의 아동을 둔 직접양육담당자인 미혼모가 현실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자립할 기회를 가지기 어렵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전제되어야 하며,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미혼모의 경우 원 가족과의 단절 등으로 미혼모에 대한 부양의무자가 실질적으로 미혼모와 그 출생자를 부양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전제로 미혼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는 최근 저출산 현상이 극심하며, 이러한 현상의 이면의 원인으로 나타나는 것 중 한 가지는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고비용이 출산 기피와 연결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혼인 및 가족을 구성하는데 경제적인 요소가 핵심적인 것으로 자리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미혼모와 자녀로 구성된 관계를 가족의 새로운 유형으로 인식하고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경제적인 지원이 필수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우리 법은 독자적인 미혼모 지원 법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통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법체계적으로 개별적인 유형화 보다 통일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이나, 적어도 그 원인이 어디에 있건 직접 양육을 담당하는 여성의 입장에 대한 배려와, 양육대상인 자녀의 연령에 따른 차별적 지원체계 구축이 없는 진정한 의미에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자리매김할 수 없을 것이다.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유형별로 한부모가 되는 경우를 정의하고 있으나, 한부모의 원인 보다 중요한 것은 한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아동의 연령에 의하여 한부모의 노동시장에서의 역할이 좌우될 수 있다는 점과 이것이 미혼모 가족의 가장 핵심적 문제인 경제적 문제의 해결과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부모의 원인별 분석 이외에 양육대상의 연령별 분석에 따라 지원체계를 재구성하는 것이 요구되며, 이에 의해서만 미혼모 가족이 실질적으로 가족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근조, 『미혼모와 그 자녀의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4.
- 김주수,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5.
- 김유경 / 조애저 / 노충래, 미혼모의 출산·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 김용한,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4.
- 노현정, 미혼모 복지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2.
- 박동섭,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6.
- 박정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의 심리에 관하여, 서울가정법원 실무연구 8권.
- 송덕수, 신민법강의, 박영사, 2009.
- 유유박, 한국의 미혼모 문제와 그 대책, 중앙대학교 사회개발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0.
- 이경희, 가족법, 법원사, 2008.
- 조광훈, 이혼후 단독친권자로 결정된 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한 부모의 친권 행사에 관한 연구, 사법행정, 한국사법행정학회, 제50권 2호, 2009.
- 표갑수, 『아동 및 청소년복지론』, 청주대학교출판부, 1994.
- 한국여성개발원, 미혼모의 실태분석, 1984.
- 한국여성정책원, 미혼모를 둘러싼 현황과 쟁점, 제47차 여성정책포럼 발제문.
- 여성가족부, 미혼모부자 종합대책에 관한 연구, 2005.
-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7.
- 이현재, 미국입양법에 있어서 혼외부의 헌법적 권리에 관한 고찰, 민사법연구, 대한민사법학회.

부록

입양의 동의 또는 대락 및 파양의 대락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29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입양의 동의 또는 대락 및 파양의 대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15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입양대락)

- _ ① 양자가 될 사람이 15세 미만인 경우에 친권자가 그를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하는 때에는, 입양신고서에 그 승낙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서등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 _ ② 다만, 후견인이 15세 미만의 양자가 될 사람을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하는 경우에는, 입양신고서에 그 승낙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서등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 입양신고는 수리해서는 안 된다(『민법』 제869조).

제3조(입양의 동의)

- _ ①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 신고서에 부모의 입양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하고(다만, 가족관계등록부에 법원으로부터 친권이 상실된 사람으로 기록된 부 또는 모의 입양동의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부모가 사망 등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 직계존속의 입양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민법』 제870조).
- _ ②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부모와 다른 직계존속이 없는 때에는, 입양신고서에 후견인의 동의서 및 그 동의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서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민법』 제871조). 다만, 입양동의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서등본을 첨부하여야 할 후견인은 양자가 될 사람의 직계존속이 아닌 사람을 말하며, 입양동의권자인 직계존속이 후견인이 된 경우에는 입양동의서를 첨부하면 되고, 그 동의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서등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 _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민법』 제869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15세 미만인 양자가 될 사람을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예: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친권자로서 15세 미만인 양자가 될 사람을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한 경우에도 친권자가 아닌 다른 부 또는 모의 입양동의서를 입양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후견인이 15세 미만인 양자가 될 사람을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한 경우에도 다른 직계존속이 따로 있으면 그의 입양

동의서를 입양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입양대락자는 입양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제4조(15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협의상 파양)

— ① 양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에 「민법」 제869조에 따라 입양을 대락한 사람이 양자를 갈음하여 협의상 파양을 하는 때에는, 그 협의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서등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 ② 다만, 후견인 또는 생가(생가)의 다른 직계존속이 15세 미만인 양자를 갈음하여 협의상 파양을 하는 때에는, 그 협의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서등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 파양신고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민법」 제899조).

부 칙

—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입양의 동의 또는 대락 및 파양의 대락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29호
2007.12.10 제정

◆ 주제발표 2 ◆

미혼모 자립지원의 주요 쟁점과 해법(1)

학생미혼모 실태와 학업지속을 위한
교육복지적 대안 연구

석창훈 (고려대학교 연구위원)

학생미혼모 실태와 학업지속을 위한 교육복지적 대안 연구¹⁾

석창훈 (고려대학교 연구위원)²⁾

I. 서론

“아이가 아이를 낳는다.” 이 말은 우리 사회의 십대미혼모 문제를 단적으로 표현한다. 실제로 우리나라 미혼모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중 학생 연령층에 있는 십대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조사해보면 연구에 따라 작게는 1/3(허남순·노충래, 2005:26)에서, 많게는 2/3(김현진, 2001:23)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해마다 그 비율이 증가하는 양상이다. 십대미혼모의 증가추세는 청소년들이 혼전 성경험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며, 성경험을 또한 증가하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미혼모의 증가와 함께 미혼모의 저연령화 현상도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다. 특히 학생신분으로서 임신이라는 위기상황을 경험하는 것은 청소년기의 발달과정에 달성해야하는 과업을 송두리째 파괴시키는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이다(장순복 외, 2000:48).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TV나 영화 속의 리틀맘(예를 들면, 채널 CGV의 ‘리틀맘 스캔들’, KBS 인간극장의 ‘나는 엄마다’, 관람객 800만 명의 영화 ‘과속스캔들’ 등)에서는 ‘대견하고 책임 있는 어린 부모’로 그려져 십대미혼모가 겪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곤경이 간과되기도 하며, 일부 십대의 경우, 학생 미혼모가 ‘무모한 행동’이라는 답변보다는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용기 있고 책임감 있는 행동’이라는 응답이 세 배 이상 높게 응답함으로써(위클리조선, 2008년 7월 15일) 신드롬 현상을 부추기는 것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결함모델(deficit model)에 따르면 학생연령층에 해당하는 십대—이른바 학생미혼모³⁾—의

1) 본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 2008년 하반기 정책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2) 석창훈(전 대구가톨릭대학교 학술연구교수 / 현 고려대학교 입학연구위원, chseog@korea.ac.kr)

3) 학생미혼모(unmarried student-mothers)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합의된 정의는 없지만,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청소년 임신을 종합적으로 다룬 보고서『청소년 임신(Adolescent Pregnancy)』은 ‘청소년(adolescent)’이라는 용어가 ‘십대(teenager)’라는 용어와 유사하다고 함으로써 청소년 임신을 10세에서 19세 사이의 여성이 임신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에 대한 연령구분이 법률마다 다른 상황(『청소년기본법』에서는 9세 이상 24세 이하를 청소년으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19세 미만의 남녀를 청소년으로, 『소년법』에서는 19세 미만인 자를 소년으로 규정,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음)에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24세 미만의 미혼모를 ‘청소년 한부모’라는 용어로 규정하고 관련 정책을 준비

임신은 신체적, 사회적, 교육적 및 직업적 발달을 크게 바뀌게 된다. 특히 교육적 측면에서 십대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학업을 중단하며, 이러한 학업 중단은 일생을 통하여 실업상태나 잠재적 실업에 놓일 가능성을 높인다(김정휘, 2001:246). 즉 십대의 조기 임신은 학업중단—역량개발 기회박탈—무직이나 실업—빈곤의 악순환에 빠져들고, 자녀교육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또 십대미혼모는 어린 나이에 거의 모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임신과 출산의 모든 과정을 혼자서 감당해야 하므로 마음의 혼란(35.6%), 경제적 문제(23.5%), 가족과의 관계(15.2%)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허남순·노충래, 2005:39). 따라서 학업이 중단된 미혼모들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복지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학생연령층에 해당하는 미혼모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부족한 상태여서 체계적인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학생미혼모의 실태를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미혼모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복지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Ⅱ. 교육현안으로서의 학생미혼모 실태와 문제

우리나라에서 미혼모가 된다는 사실은 외국과 달리 전통적인 윤리관과 도덕적 규범에 비추어 볼 때 용납될 수 없는 일로 죄악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임신결과에 대한 책임은 모두 여성에게 전가될 뿐만 아니라 사회의 부정적 시선으로 이중적인 고통을 받게 된다. 그 결과 미혼모의 문제는 더욱 음성화되고 생명경시는 물론 무분별한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 현상이 공공연한 상황에서, 학생신분으로 십대 미혼모가 된다는 사실은 성인미혼모보다 더욱 대처하기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게 됨을 의미한다(최양자·김귀분, 2004:332). 이러한 이유로 학생미혼모의 실태를 공식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혼모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를 통해 학생미혼모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한 후,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학생미혼모 실태를 확인하고자 한다.

1. 학생미혼모 현황

2000년대 한국사회에서 학생 미혼모의 현황은 어떠한가? 우리나라 출산율을 종합해서 발표한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지표 2005』에 의하면 연령대별 출산율은 다음과 같다.

중이다. 본 연구의 목적이 교육현안으로 당면한 학생미혼모의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복지 정책을 위한 방안을 탐색하는 것이므로 미혼모의 범주에 청소년 및 학생기준을 첨가하여 ‘학생미혼모는 법적으로 미혼의 상태에서 임신 중이거나 출산을 한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학생’으로 정의한다.

〈표 1〉 합계출산율과 연령별출산율

연도	합계출산율 (여자1명당)	연령별 출산율(해당연령 여자인구 천명당)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2000	1.47	2.5	39.0	150.6	84.2	17.4	2.6	0.2
2001	1.30	2.2	31.6	130.1	78.3	17.2	2.5	0.2
2002	1.17	2.7	26.6	111.3	75.0	16.7	2.4	0.2
2003	1.19	2.5	23.7	112.3	79.9	17.3	2.5	0.2
2004	1.16	2.3	20.4	104.6	84.2	18.6	2.5	0.2

출처: 통계청(2005), 한국의 사회지표

<표 1>을 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해마다 꾸준히 감소하는 상황이지만 2004년까지 십대(15세~19세) 출산율은 해당연령의 여성 천 명당 2.3명으로 그 추세가 크게 증가하거나 감소하지는 않는 상황이다. 또 통계청의『인구동태통계연보』에 의하면 2005년에는 2.1명인 것이 2006년에는 2.2명으로 약간 변화를 보여 주었다. 2006년 통계청이 발표한 15세에서 19세 인구(15세 : 322,380명, 16세: 308,571명, 17세: 293,986명, 18세: 290,824명, 19세 : 293,060명, 계: 1,508,821명)의 출산율(1,000명당 2.2명)을 바탕으로 십대의 출산실태를 추측해보면, 한해 3,300여명의 아기를 낳으며 그 숫자만큼 십대미혼모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가능하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2004년에 출산보험금을 받은 청소년들이 2,600여명에 이르고, 싸이월드에 있는 국내최대 리틀맘 동아리에는 4,8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은 학생 미혼모의 숫자가 생각 밖으로 많음을 짐작할 수 있다(신학용, 2006:2-3).

한편 국가청소년위원회의 국정감사의 발표자료(2006)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청소년미혼모는 5천명에서 6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전체미혼모 가운데 청소년의 비중은 93년 32.4%에서 2000년 55.1%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만 15세 이하의 미혼모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김혜영, 2008:28).

이러한 추정치와는 달리 보건복지가족부의 통계자료를 활용하면 우리나라 미혼모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가족부의『2007년 보건복지통계연보』에 의하면 연도별 미혼모 아동의 발생수 및 비율은 <표 2>와 같다.

〈표 2〉 연도별 미혼모 아동의 발생수 및 비율

(단위: 명, %)

구분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요보호대상아동수(A)	5,721	4,576	9,085	10,586	10,057	10,222	9,393	9,420	9,034
미혼모아동수(B)	2,369	1,285	4,190	4,897	4,337	4,457	4,004	2,638	3,022
요보호아동 대비 미혼모아동비율	41.4	28.1	46.1	46.3	43.1	43.6	42.6	28.00	33.45

출처: 보건복지가족부(2007), 보건복지통계연보

우리나라의 요보호대상 아동수는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나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미혼모 아동의 발생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김유경 외, 2006:80). <표 2>를 통해 미혼모 및 미혼모아동의 발생 추세를 살펴보면, 미혼모에 의한 요보호아동 발생숫자는 1995년의 1,285명이던 것이 2000년 4,190명으로 늘어났으며, 2003년 4,457명을 최고점으로 2005년에는 2,638명, 2006년에는 3,022명으로 발생숫자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전체 미혼모 가운데 학생미혼모의 숫자를 추정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여성가족부에서 2005년 전국 미혼모시설의 미혼모 238명을 대상으로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미혼모의 연령대는 15세 이하가 1.7%(4명), 16-20세가 31.5%(75명)를 차지하여 전체 미혼모 가운데 33.2%가 20세 이하의 미혼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김유경 외(2006:211)가 전국 194명의 미혼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는 19세 이하가 전체의 39.5%인 75명을 차지하였으며, 전국 4대 입양기관(홀트아동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을 대상으로 조사한 허남순(2005:18)의 미혼모 연령 조사에서는 2004년의 경우, 15세 미만이 3.5%, 16세에서 20세까지가 35.8%로 전체의 약 40%가 청소년 미혼모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전국규모 조사에서 나타난 청소년 미혼모 평균치(37.3%)를 바탕으로 전체 미혼모 가운데 학생 미혼모(20세 연령 제외)를 추정해 보면, 2006년의 경우 약 3,000명 정도의 전체 미혼모 가운데 약 1,000명 정도의 학생 미혼모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 숫자는 인구동태통계연보에서 추측한 3,300명과 비교해보면 1/3 수준에 못 미치는 최소한의 추정치임을 알 수 있다.

2. 학생미혼모 문제

전체 인구에 비하여 그 숫자는 적다고 하더라도 학생미혼모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강력하다. 학생미혼모에 대해 우리보다 앞선 대책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와 비교해봄으로써 학생 미혼모의 문제를 교육측면, 건강측면, 기타측면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 교육측면

130명의 십대미혼모를 대상으로 특성을 연구한 윤미현·이재현(2003:154)의 조사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의 31.6%(41명)가 중학교 중퇴 및 졸업이며, 61.5%(80명)가 고등학교 중퇴 및 졸업으로 나타나 학업중단의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였다. 또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원한 조사에 의하면 미혼모 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 미혼모 63명 가운데 71.4%가 임신당시 이미 학업을 중단한 상태였다(홍순혜 외, 2007:3).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십대미혼모의 새 출발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그룹홈만들기’를 시도한 정옥희(2002:32)의 연구에서는 중학교 재학중인 대상자가 8.2%, 중학교 중퇴는 27.0%, 고등학교 재학중은 16.2%, 고등학교 중퇴가 35.1%에 달하며, 고등학교 졸업자는 2.7%에 불과함으로써 학생미혼모의 학업중단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임신에 의해 학업을 중단한 학생미혼모는 학업을 지속한 또래보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아질 수 있고, 나아가 미래사회의 노동생산성 저하를 가져오는 사회문제가 된다(Douglas, 1997:187).

우리나라에는 아직 학생미혼모의 교육적 문제에 대한 연구가 제한적이므로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현재 미국의 경우 5명 중 2명의 청소년이 20세가 되기 전 임신을 하고 매년 750,000명의 십대가 임신을 한다. Guttmacher의 조사(2006)에 의하면 최근의 청소년 임신율이 1990년 청소년 임신율이 최고조로 다다랐을 때보다 36% 정도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산업화된 서양 각국에 비해서는 십대 임신율이 가장 높다. 미국의 십대 임신율은 캐나다의 2배, 영국, 프랑스, 스웨덴의 4배에 달한다(Guttmacher Institute, 2006).

미국의 경우, 십대 학생 신분으로서 임신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학업문제이다. 학생미혼모의 58%가 학업을 중단하는데 28%는 임신을 시작하면서 학업을 중단하고, 30%는 임신 중에 학업을 포기한다. 학생미혼모의 50%가 유급을 하며 십대에 임신을 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더 많이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다. 학생미혼모의 41%만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5%만이 30세가 되기 전까지 대학에 진학한다. NCPTP(National Campaign to Prevent Teen Pregnancy)에 따르면 학생미혼모의 자녀 중 남아의 경우 13%가 감옥에 가고, 여아의 경우 22%가 그들의 엄마처럼 십대에 임신을 하게 된다. 학생미혼모들은 감정적으로 성숙하지 못하여 그들의 자녀를 방임하거나 학대하기 쉬우며 사회적, 감성적, 이성적으로 불충분하게 양육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로 인해 학생미혼모가 낳은 자녀들은 학교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학생미혼모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어야 하는 줄을 모르고 자녀들에게 교육할 기회를 북돋아 주는 법을 알지 못한다. 학생미혼모의 약 50%는 첫 출산 후 1년 이내에 사회보장제도에 의지하고 75%는 5년 이내에 사회보장제도에 의지하게 된다(유미영, 2007:320).

2) 건강측면

십대미혼모의 일반적인 문제점은 건강문제인데 이들은 출산후 비만, 고혈압, 빈혈에 걸릴 확률이 20세 이상의 여자 산모보다 높다. NCPTP의 조사에 따르면 십대미혼모의 자녀는 미숙아이거나 시각장애, 정신장애나 혹은 기타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경우가 많아 20세 이상 산모들의 신생아보다 사망률이 1.4배나 높다. 십대미혼모의 신생아 사망률이 높은 원인으로 는 임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임신 중에 적절한 신체검진을 하지 못했거나, 음주, 흡연 마약류의 남용에 따른 부작용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십대미혼모들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십대미혼모들이 처음 자녀를 양육하는 첫 14년간 병원을 찾는 횟수는 매년 3.8회인 반면 20대 이상 엄마들의 자녀의 경우 진료를 받는 횟수는 매년 4.3회로 훨씬 높다. 십대미혼모들은 20대 이상 엄마들보다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자녀의 성장발달, 행동발달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다(유미영, 2007:319).

3) 기타측면

교육과 건강 측면뿐만 아니라 십대미혼모들에게는 더 많은 장벽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십대 중반에 형성된 대다수의 친구관계는 출산으로 인해 더 이상 지속되기 힘들고, 출산 과정에서 주변 사람의 부정적 인식에 대한 분노의 감정들을 쉽게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임신과 출산에 대한 가족의 태도 및 이후 경제적인 지원 등 확대가족과 얽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일부 청소년들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직업을 찾거나 다른 지역에서 직업 훈련을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엄마와 아이가 만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학생미혼모들이 겪을 수 있는 부정적 문제이다. 그런데 기존 연구와 달리 Phoenix(1991)는 16세에서 19세 사이에 임신한 80명의 여자청소년의 경험을 연구한 결과, 여자청소년들이 인종, 교육, 직업 그리고 아이를 가진 이유가 다양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여자청소년들은 모두 빈곤상태에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으며 매우 곤란한 상황에서도 아이들을 키우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노력하였다는 유사점도 발견하였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놓여 있는 성인 여성들과 비교하여 이러한 여자청소년들도 성인 여성들과 동일한 대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원가족으로부터 정서적 지지와 경제적 지원을 받을 경우(Dennison and Coleman, 1998), 십대미혼부가 아이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아이들에 대한 가정교육에 있어서 일정부분 역할을 담당한 경우(Robinson, 1998, Speak, 1997) 자신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유능한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김기현 외, 2007:96-97).

3. 학생미혼모를 위한 교육복지 실태

교육복지란 교육소외·결손집단에 대하여 교육기회를 확충함과 동시에 예방·치료·보상 활동을 통하여 교육의 질적 평등을 보장하고, 정상적 학생집단에 대하여는 잠재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전인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여건을 계속적으로 개선해주는 것을 말한다(윤철수 외, 2006:22). 이런 취지에서 볼 때 학생미혼모를 위한 교육복지 서비스는 시급한 당면 현안이며, 국민의 최저 교육수준을 보장하는 교육복지의 첫 번째 기본목표와도 부합하는 정책 수요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교육복지적 관점에서 학생미혼모에 대한 서비스 실태는 어떠한가? 특별히 학생미혼모를 위한 복지적 서비스는 예방적 차원의 사전서비스형태든, 해결적 차원의 사후서비스형태든 양자 모두 미미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교육제도 하에서는 임신 후 학교를 계속 다니거나 출산 후 학교로 복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만큼 학생미혼모만을 위한 사후적 복지서비스가 부족하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십대의 출산 후 학교복귀는 증가하는 추세이며(Rich and Kim, 1999; Frustenberg and Weiss, 1997), 아이의 양육을 돕기 위하여 학교에 보육시설을 마련해주는 등의 지원을 해주고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임신한 청소년의 교육적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교육이수를 목적으로 하는 대안공립학교(alternative public school)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Spear, 1997:220). 물론 근본적으로 미혼모 발생을 예방하여야 하지만, 이미 미혼모가 된 경우, 학교교육이라는 인적 자본에의 투자를 통해 미혼모 이후 자립 가능성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점이다(Rich·이수연, 2001:165-166). 즉 미혼모가 출산 후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한 인적 자본에의 투입이 학생미혼모를 위한 바람직한 사후적 교육복지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또 청소년의 첫 임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김만지(2002:79)는 학교 중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이라고 밝혔다. 학교 중퇴경험이 있는 미혼모 58명과 학교중퇴 경험이 없는 미혼모 56명을 대상으로 한 차이검증에서 학교 중퇴 경험이 있는 여자청소년의 첫 임신 평균연령(17.95세)이 학교중퇴 경험이 없는 여자청소년의 첫 임신 평균 연령(22.04세) 보다 훨씬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임을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는 학교중퇴가 청소년의 첫 임신연령을 예측하는 한 변인이며, 학교체계와의 관계가 빈약할수록 이른 청소년 임신의 위험이 커진다는 다수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최근 학교중퇴율이 증가하고, 미혼모 가운데 재학생과 학교중퇴자가 많다는 연구를 고려해볼 때, 학교중퇴가 임신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학교·지역사회·학부모가 연계하는 생태체계적 복지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예방적 차원에서 지역사회 내에서의 대안교육 프로그램이 요구되는데, 정옥희(2000:80)가 낮은 학력으로 인해 사회적 인 발전 기회를 상실, 빈곤이 악순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규모의 도시형 대안학교 설립을

제안한 연구와 맥을 같이 하는 바람직한 사전적 교육복지 서비스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008년 10월-11월(2개월간) 전국 총 46개소의 미혼모시설을 대상으로 학생미혼모의 교육복지 실태를 설문조사하였다. 총 36개소의 미혼모 시설(응답률 76.1%)에서 73명의 학생미혼모가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25명의 학생미혼모를 대상으로 추가 심층면담을 수행하였다.

조사결과, 학생미혼모의 평균연령은 16.77세(고등학교 1학년 재학 연령대)이며, 18세가 전체의 41.1%였고, 17세가 23.3%, 16세가 19.2%, 15세가 5.5%, 14세가 9.6%이며, 13세도 1명(1.4%)으로서 학생미혼모의 연령이 십대 초반에서 후반으로 갈수록,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였다.

학생미혼모의 교육정도는 실업계(전문계) 고등학교 중퇴가 34.2%(25명)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중퇴가 17.8%(13명), 인문계 고등학교 중퇴가 13.7%(10명)이었으며, 학생미혼모의 총 84.9%가 학업중단 상태였다. 학생 미혼모의 발생이 지역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학생미혼모의 경우(13.7%), 폭력서클 가입에 따른 일탈과 지위비행이 학생시기의 임신이라는 위기상황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음을 추론할 수 있었다.

임신한 학생이 학교에 임신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가 알린 경우보다 약 7:3의 비율로 높았으며, 임신 후 애로사항 가운데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임신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과 위기상담의 필요성, 학업중단에 대한 두려움을 꼽았다.

학생미혼모가 앞으로 학업을 계속하고 싶은지를 확인한 결과, 교육욕구가 ‘매우 강하다’가 30.1%(22명), ‘강하다’가 28.8%(21명)로 나타나 2/3이상의 학생미혼모가 중단된 학업을 계속하고 싶다는 열의를 보여주었다. 학업을 계속하고 싶은 이유로는 ‘최소한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사회적으로 무시당하지 않으므로’가 가장 높았으며,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고 싶지 않아서’, ‘더 나은 직장을 얻기 위해’,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미래의 사회·경제적 지위 안정에 중요하게 기능함을 대부분의 학생미혼모가 인식함을 반영하였다.

학업을 계속하고는 싶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부딪히는 제약조건으로 ‘복학 및 전학의 어려움’과 ‘학업중단으로 인한 공부에 자신감 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생미혼모를 위하여 학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주기를 희망하는 가에 대한 조사에서는 가장 높은 비율로 ‘임신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병가 형식을 통해 출석을 인정’해주거나 ‘휴학’을 인정해 줌으로써 학업이 중단되지 않기를 강력하게 희망하였다.

학업을 계속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검정고시 준비’가 47.9%(35명)로 가장 높았으며, ‘미혼모 시설로 교사를 파견하여 수업을 받게 하고, 그것을 학교에서 받은 수업과 동일한 학력으로 인정해 준다가 16.4%(12명), ‘원래 다니던 학교에서 학업을 계속 한다’가 13.7%(10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생미혼모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하여 미혼모시설로 교사를 파견하여 학업을 계속하며,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과 동일하게 학력을 인정해주는 제도에 대해 ‘아주 필요하다’가 37.9%(27명), ‘필요하다’가 28.8%(21명)로 나타난 반면, ‘불필요하다’가 5.5%(4명)에 불과하였다. 이는 학생미혼모 입장에서 학업지속을 위하여 미혼모시설에 교사를 파견하여 교육을 받고 학력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적 장치에 대다수의 학생미혼모가 적극적으로 지지함을 확인하였다.

학생미혼모를 위한 정부의 지원에서는 ‘학업수행 및 아기 양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책’을 1순위로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대책’과,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미혼모의 성경험과 임신경로 파악은 청소년의 성적 행동과 경향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조사결과, 최초의 성관계 연령은 13세부터 18세까지 다양하며 그 중에서도 가장 빈도가 높은 연령은 15세(중학교 3학년)로 24.7%(18명)였다. 처음 성관계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선행연구는 ‘순간적인 충동’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랑하는 사이여서 자연스럽게’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나 십대들의 이성교제가 더욱 개방적이며, 애정표현이 조숙함을 반영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최초 성경험한 경우가 성폭력에 의한 것이 5.5%(4명)로써 여성들이 성적 폭력이나 피해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구축도 병행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학생미혼모의 재임신율(27.4%)이 성인미혼모의 재임신율(46.8%) 보다 다소 낮았지만 이는 연령대의 차이에 따른 것이며 실제로 학생연령대의 재임신율이 27.4%에 이른다는 사실은 학교 성교육의 한계와 십대의 성윤리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미혼부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친구가 63.0%(4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선배가 27.4%(20명)로 대부분 건전하지 못한 이성교제의 결과로 학생미혼모의 임신에 이르게 됨을 나타냈다.

학교에 다닐 때 성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95.9%(70명)가 성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성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4.1%(3명)에 불과하였으며, 성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학생미혼모에게 성교육 내용에 대한 만족을 확인한 결과, 대체적으로 학교 성교육의 내용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학생미혼모와 가족관계에 대한 응답에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비율보다 그렇지 못한 가정의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는 점과 특히 남자친구와 동거관계에서 임신 상황이 발생하여 학생미혼모가 되는 경우가 아주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부모로부터 폭력경험이 없다는 학생미혼모의 응답이 61.6%(45명)으로 폭력을 경험한 전체 응답 38.4%(28명)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가출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체의 83.6%(81명)이 가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16.4%(12명)는 가출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부모폭력 경험과 가출경험을 단순

비교해 보면 부모폭력보다 가출경험이 학생미혼모라는 결과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신사실을 미혼부가 알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출산하여 입양 시키자고 했다’는 비율이 37.1%(23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출산하여 함께 키우자고 했다’는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인 경우가 16.1%(10명)로 나타난 반면, ‘인공유산을 권유’하거나 ‘관계를 단절하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알아서 하라’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각각 16.1%(10명)로 나타났으며, 적극적으로 ‘관계를 단절하려고 한’ 경우도 11.4%(7명)로 나타나 임신에 대해 미혼부의 책임강화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반영하였다.

학생미혼모와 또래친구 중에 미혼모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61.6%(45명)가 ‘없다’, 26.0%(19명)가 ‘있다’, 12.2%(9명)은 ‘잘 모르겠다’라고 하였다. 건강한 성정보를 공유하고 바람직한 성문화를 경험하는 교우관계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Ⅲ. 학생미혼모의 학업지속을 위한 교육복지적 대안

1. 학생미혼모를 위한 교육복지 대안 탐색

일반적으로 정책연구는 정책 의제, 정책 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정책에 관한 지적 활동 또는 그 결과를 의미한다. 이는 정책 결정자를 위한 정보 획득이 목적인 정책분석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지식의 획득이 정책연구의 주목적이다. 이러한 연구 관점에서 본 연구는 학생미혼모라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 문헌조사와 실태조사를 통해 수집된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복지적 관점에서 대안을 탐색하고, 이들 대안 가운데 선택되어진 대안이 교육정책 결정자에 의하여 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 학생미혼모의 학업지속을 위한 교육복지적 대안은 다음과 같다(표 3 참조).

〈표 3〉 학생미혼모의 학업지속을 위한 교육복지적 대안

추진일정 접근 생태 체계	단기		중·장기	
	예방	해결	예방	해결
학교	· 학업중단 예방 · 학교성교육 내실화 · 또래상담 활성화 · 건전한 이성교제 · 학교분위기 조성 · 청소년 성교육을 위한 부모교육 실시	· 학생미혼모상담 (전문상담교사, 학교사 회복지사 활용)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생미혼모 부모상담 · 정확한 학생미혼모 발생 현황보고 · 학생미혼모 불이익 근절	· 인권 및 양성평등교육 강화(교장/교감 연수) · 임신예방 교육강화 (교사/학생 대상) ·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환경 정비 계속	· 미국의 4T형 대안학교 설립 · 교내 병원(School Based Clinic)제도 도입 · Wee 프로젝트 추진 (학생미혼모서비스 강화)
지역 사회	· 학생미혼모에 대한 인식 변화 · 낙태예방 캠페인	· CYS-Net 활용 · 학생미혼모 자아존중감 증진프로그램 개발 · 맞춤형 자립지원 프로그램 제공	· 지역사회 기관 ‘중심의 성윤리 및 정결 캠페인 · 효율적인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프로그 램 개발	· 여자대학생 멘토링 장학제도 · 미혼모 조례제정 · 미혼모시설 확대 (중간의 집 증설) · 미혼모가정 지원
국가 수준	· 학생미혼모 예방 홍보 대사(스타) 위촉 · 대중매체 활용 (학생미혼모 긍정 사례 발굴 전파와 공익광고)	· 미혼모시설 교사 파견 제도(튜터링) · 지역거점 교육복지 유관 센터 활용 대안교육 실시 · 학생미혼모 학습지원 (학원비, 검정고시비 등) · 교육복지법 시행령에 학생미혼모 관련조항 삽입	· 임신예방 및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 건전한 이성교제를 위한 MPP(결혼준비 프로그램) 개발 ·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	· 미혼모관련 단일법령 제정 · 미혼부 책임 법제화 · 재가학생미혼모를 위 한 홈스쿨링 학력인정

1) 단기 방안

(1) 학교 차원

① 예방적 접근

- 학업중단 예방 : 본 조사에 의하면 학생미혼모의 임신시 학업상태가 ‘재학중’인 경우 (42.5%)보다 ‘학업을 중단한’ 상태(56.2%)에서의 임신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학생의 학업중단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학생미혼모의 발생을 예방하는 주요한 접근이다.
- 학교 성교육 내실화 : 본 조사에 의하면 현재 초·중·고등학교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교육내용이 학생들의 만족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성교육 경험률은 95.9%이지만 성교육에 대해 만족한다는 비율은 7.1%) 청소년들의 욕구와 발달 단계에

맞도록 성교육의 내용이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또 성교육 방법에 있어서도 전문강사를 활용하여 임신과 낙태를 예방하거나 실질적인 성교육을 실시하며, 피임, 성병과 AIDS, 동성애, 성폭력 등과 같은 사회적 성문제와 이슈에 대해서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성교육 방법을 개발한다.

- **또래상담 활성화** : 일본의 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또래상담(peer counseling)을 활성화하여 또래상담자와 내담자가 동반자적 자세에서 서로 공감하며 문제해결의 방안을 탐색하도록 한다. 이것은 학생미혼모당사자뿐 아니라 또래상담자에게도 학생미혼모의 예방적 가치가 있는 선진 상담제도이다.
- **건전한 이성교제 학교분위기 조성** : 학생미혼모의 임신경로조사에서 확인된 것처럼 처음 성관계 상황이 선행연구에서는 ‘순간적인 충동’이 가장 높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여서 자연스럽게’가 더 높게 나타났다. 또 선배(주로 학교선배)와 성적 교제가 빈번한 것은 십대들의 이성교제가 더욱 개방적이며 애정 표현이 사회통념보다 조숙함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건전한 이성교제의 학교분위기 조성이 학생미혼모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라 하겠다.
- **청소년 성교육을 위한 부모교육 실시** : 전국의 대부분 초·중·고등학교에서 년 1회 정도의 학부모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학부모 연 수를 이용하거나, 횟수를 늘려 가정에서도 부모에 의해서 효율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부모교육의 실시를 권장한다.

② 해결적 접근

- **학생미혼모상담** : 학생미혼모는 일반학생보다 더 신중하고 전문적인상담과 복지 개입이 필요한 대상이다. 따라서 학생미혼모가 발생한다면 현재 운용중인 전문상담교사, 학교사회복지사가 주축이 되어 학생미혼모를 위한 전문적인 개인상담 뿐 아니라 미혼모 가족, 미혼모시설, 의료기관, 대안교육기관 등과 연계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 **학생미혼모 부모상담** : 학생미혼모가 가족체계 내에서 가장 절실하게 바라는 것은 ‘부모의 이해와 용서’이듯이 학생미혼모 발생부터 부모(보호자)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부모상담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학생미혼모의 부모들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학생미혼모를 지도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교사, 학교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전문적으로 훈련하여 학생미혼모 부모상담을 실시한다.

- 정확한 학생미혼모 발생 현황 보고 : 현재 학생미혼모의 발생에 대한 공식 통계는 불가능하다. 사회적 공감대를 통해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 자료가 필수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인구센서스 조사에서 십대의 임신과 출산뿐 아니라 낙태숫자까지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다. 학생미혼모 발생을 숨기기 보다는 공개하고 대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학생미혼모 문제해결에 첫단계이다. 따라서 학교현장에서 학생미혼모 발생을 정확하게 상급 기관에 보고를 하며, 상급기관에서는 해당학교의 비밀을 절대보장하고 정책자료로만 활용하면 될 것이다.
- 학생미혼모 불이익 근절 : 학생신분으로 임신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현장에서 가해지는 다수의 불이익과 징계 대신 선도적 차원에서 학업을 지속할 수 있고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칙과 선도규정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2) 지역사회 차원

① 예방적 접근

- 학생미혼모에 대한 인식 변화 : 학생미혼모를 비난하기보다는 인권차원에서 존중받는 사회적 약자로 배려하는 사회적 인식이 요청된다.
- 낙태예방 캠페인 : 우리나라는 낙태의 비율이 아주 높은 나라이다. 생명수호 차원에서 낙태보다 출산을 선택하는 미혼모의 행동이 용기있고 책임있는 행동으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으며, 미혼모를 수용하고 지원하는 캠페인(예를 들면, 대한사회복지회의 블루레터 캠페인)을 지역사회단위로 시민·여성사회단체가 전개해야 할 것이다.

② 해결적 접근

- CYS-Net 활용 : 현재 운영 중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활용하여 가출이나 폭력 중심의 청소년 문제뿐 아니라 학업을 중단한 학생미혼모를 주요 위기 대상으로 삼아 상담, 보호, 긴급 구조와 같은 통합적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면 추가적인 예산투입이나 인적 재배치 없이도 학생미혼모의 학업중단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다.
- 학생미혼모 자존감증진 프로그램 개발 : 학생미혼모 부적합감과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생미혼모를 위한 자아존중감 증진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 맞춤형 자립지원 프로그램 제공 : 미혼모가 자녀를 입양하기 보다는 양육하겠다는 비율이 점증하는 현실 속에서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미혼모의 자립을 돕기 위해서는 미혼모의 능력에 맞는 맞춤형 자립지원과 취업안내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3) 국가 차원

① 예방적 접근

- 학생미혼모 예방 홍보대사(스타급) 위촉 : 청소년에게 모델링의 영향력이 큰 대중 스타 가운데 학생미혼모예방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학생미혼모를 위한 공익광고와 대중 인식 개선을 펼치는 것이다.
- 대중매체(TV, 신문, 인터넷) 활용 : 학생미혼모가 성공적으로 학업을 지속하여 대학에 입학하거나 취업, 결혼한 긍정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할 필요가 있겠다. 본 조사에서도 학교교사의 동의하에 학업을 지속한 사례가 있었으며, 미혼모시설에서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에 입학하여 현직 교사로 성공한 적응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언론이나 방송, 인터넷 매체를 통해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

② 해결적 접근

- 미혼모시설 교사파견(튜터링) 제도 : 미혼모시설에 교사를 파견하여 학생미혼모들에게 개별화된 수업을 제공하는 튜터링 제도는 학생미혼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학업지속 방안이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 지역거점 교육복지 유관센터 활용 대안교육 실시 : 미혼모시설, 청소년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Wee 센터와 같은 교육복지 유관센터를 지역별로 거점화하여 학생미혼모를 위한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이수자에 대해 원적학교 졸업이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해주는 제도 도입이 요구된다.
- 학생미혼모 학습지원 : 학생미혼모의 학업지속을 위한 사교육비(학원비, 검정고시비 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이 제도화된다면 학생미혼모의 학습동기를 강화하고, 교육역량을 신장시킬 것이다.

- 방송통신고등학교 편입학규제 완화 : 미혼모시설에 입소하거나 재가 학생미혼모의 경우 방송통신고등학교에 편입이 용이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 교육복지법 시행령에 학생미혼모 관련조항 삽입 : 현재 국회 심의중인 교육복지법이 통과됨을 전제로 향후 시행령에는 학생미혼모에 대한 지원조항이 삽입되어 법률적 기반을 튼튼히 한다.

2) 중·장기 방안

(1) 학교 차원

① 예방적 접근

- 인권 및 양성평등교육 강화 : 스웨덴처럼 양성평등교육은 사회적 통합의 기틀이며, 인권교육은 학습자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틀이다. 학교현장에서 이러한 인권 및 양성평등시책이 가시화되려면 무엇보다도 학교행정의 책임자 연수과정에 반드시 해당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 임신예방 교육강화 : 일본처럼 임신예방과 관련된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사와 학생들에게 동시에 실시되어야 한다. 가령 임신부체험 프로그램처럼 실제적인 임신예방 시뮬레이션 교육은 학생미혼모의 발생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환경정비 계속 : 안전한 학교 만들기의 방안으로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환경은 지속적으로 정비되어야 하며, 규정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② 해결적 접근

- 미국의 4T형 대안학교 설립 : 미국의 4T처럼 교내에 탁아보육시설이 구비되어 학생미혼모가 자녀를 돌보면서 학업을 계속하도록 지원하는 대안교육 시스템을 확립하는 일이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학교 탁아시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면 필요한 제도이다.
- 교내병원 제도 : 미국에서 성교육과 임신예방 등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교내병원(School-based Clinic)은 장기적 관점에서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수용력이 신장되면 제도적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 Wee 프로젝트 : 교육과학기술부가 위기학생 예방 및 선도를 위한 다중의 학교안전망 구축사업으로 추진 중인 Wee 프로젝트는 2012년까지 모든 중·고교의 50%까지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위기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일반학생을 보조대상으로 하며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다중의 안전망(2단계 safe-net)을 구축, 운영함으로써 현재 정부 내 각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련기관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학생들의 학교적응 지원은 물론 저출산시대 인적자원 유실방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Wee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Wee 센터의 주요 역할에 학생미혼모를 위한 서비스를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2) 지역사회 차원

① 예방적 접근

- 지역사회 기관 중심의 건강한 성윤리와 정결 캠페인 : 지역사회 기관별(시민단체, 여성단체, 복지단체 등)로 십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한 성윤리 정립과 생명수호, 정결(순결) 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그릇된 성도덕관을 바로잡고,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한다.
- 효율적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실시 : 청소년비행이나 학업중단 뿐 아니라 불건전한 이성교제와 임신도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서 주로 발생한다. 따라서 효율적인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자녀관계 치료프로그램을 지역사회단위로 개발하여 실시함으로써 청소년의 일탈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② 해결적 접근

- 여대생 멘토링(일촌맺기) 제도 : 여자 대학생을 멘토로 하고 학생미혼모를 멘티로 하는 멘토링을 형성하여 제도에 참여하는 여대생에게는 장학혜택을 제공하여 학업의욕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학생미혼모는 멘토링을 통해 건강한 이성교제를 지도받게 함으로써 대인관계 기술과 사회적응 능력을 향상시킨다.
- 미혼모 조례 제정 : 미혼모를 위한 단일 법령체계가 쉽지 않다면,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미혼모조례 제정과 미혼모지원센터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방자치단별로 특색 있게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 미혼모 시설 확대(중간의 집 증설) : 장기적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체계를 수립하여

지역별로 미혼모 시설을 확대하며, 특히 입양 보다 양육을 선택하는 미혼모가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여 중간의 집을 증설할 필요가 있다.

- 미혼모 가정지원 : 일선학교에서는 학생의 임신사실을 거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사회복지사나 전문상담교사가 학생미혼모의 부모를 상담할 기회는 적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청소년상담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같은 기관에서 학생미혼모의 부모와 가정을 위한 지원과 상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3) 국가 차원

① 예방적 접근

- 효율적인 임신예방 및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 미국의 성교육 프로그램(SEP)처럼 성적 활동의 절제 내지는 감소에 초점을 두고, 2008년 9월 11일 고시된 국가수준의 학교보건교육(보건과목)의 주요 내용으로 임신예방과 성교육 프로그램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 건전한 이성교제를 위한 결혼준비 프로그램(MPP: Marriage Preparation Program) 개발 : 영국의 성과 이성교제에 관한 교육(SRE)처럼 성적 건강을 가르치고, 가족생활, 안정적이고 우호적인 관계, 존중과 사랑, 배려를 학습하는 평생학습차원에서 건전한 이성교제를 위한 결혼준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할 필요가 있다.
-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 성에 대한 가치는 평소 가정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가르쳐야 하며, 자녀의 성교육에 있어서 부모가 맡은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 따라서 건강한 부부 및 가족관계를 촉진하는 다양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② 해결적 접근

- 미혼모 관련 단일법령 제정 : 미혼모와 관련된 복지,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단일법령의 필요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미혼부 책임 법제화 : 미혼부의 책임을 법제화하는 것은 미혼모의 자립과 자녀양육의 공동책임뿐 아니라 건전한 이성교제, 양성평등의 기초가 되기에 장기적으로 도입이 필요한 제도라 판단된다.

- 재가 학생미혼모를 위한 홈스쿨링 학력 인정 : 현재 시설에 있는 미혼모보다 시설 밖의 재가(在家) 학생미혼모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이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은 홈스쿨링이 대안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학생미혼모의 경우 홈스쿨링을 학력으로 인정하고 원적학교의 졸업장이 수여되도록 한다면 다수의 학생미혼모에게 교육권 혜택이 제공될 것이다.

IV. 결론

십대미혼모의 학업지속을 위한 다수의 대안 가운데 몇몇 선행연구에서 우선적으로 제시한 ‘학생미혼모를 위한 대안학교 설립방안’은 장기적인 접근이 요청된다. 왜냐하면 미혼모 대안교육시설을 새롭게 갖추기 위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막대하게 소요되며, 설립 이후에도 학생미혼모만을 위한 대안학교 출신이라는 부정적 낙인을 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으로 추진가능한 정책으로 학생미혼모를 ‘재학중 임신한 학생미혼모’와 ‘중퇴한 후 임신한 학생미혼모’를 구별하여 문제해결에 접근하도록 제안한다.

먼저 ‘재학중 임신한 학생미혼모’를 위해서는 학생이 임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가 자퇴나 전학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징계하는 것은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징벌적인 선도규정이나 인권침해적 학생생활지도방식을 바꾸어 명백한 법률적 근거 없이 학교 또는 교사가 임의로 학생의 교육권에 불이익을 주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하여 휴학이 필요한 경우에는 병가로 처리하되 다른 질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출석을 인정하여 휴학 후 학교로의 복귀에 어려움이 없도록 학교에서 규정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퇴나 임신한 십대미혼모’를 위해서는 학교에서 이탈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했던 무관심 대신에 제도권 안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의 기회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광역시 및 도 단위로 일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미혼모 보호시설이나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지원센터 등을 대안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그 기관으로 현직 교사나 기간제 교사를 파견, 해당과정을 이수하면 원적학교에서의 교육과정과 동일하게 인정하여 학력을 취득하게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이 실효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진이 전국에 소재한 건강가정지원센터, 미혼모 시설,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본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전화로 조사한 결과, 건강가정지원센터 16곳 가운데 10곳에서 적극적인 찬성의견(62.5%)을 보였으며, 최소 15명에서 최대 100명까지 교육할 수 있는 시설(강의실)을 갖추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 10곳의 미혼모시설 가운데 6곳에서 적극적인 찬성의사(60.0%)를 보였으며, 청소년지원센터의 경우 16곳 가운데 8곳에서 찬성의견(50.0%)을 보였다. 이 접근이 보다 구체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미혼모들이 대부분 단기보호라서 구체적인 시행방법이 중요하며(현재 대안학교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수업일수가 매 학년 180일 이상,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상 교과별 수업시간의 100분의 50이상을 운영하여야 함), 지원가능한 인센티브(1인당 교육운영비, 파견 기간제교사의 신분보장 등)의 적절성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학생미혼모뿐 아니라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이 이루어진다면 대안교육기관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학교를 그만둔 십대미혼모의 경우, 대부분 원적학교로의 복귀나 타 학교로의 전학이 어려워 학업지속을 위해서는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방송통신고등학교에 편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그와 관련된 재정적 지원—학생미혼모를 위한 ‘바우처’(voucher)나 ‘인적자원 교육계좌’—이나 여대생 튜터링 제도와 같은 교육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학업을 중단한 십대미혼모 가운데 그 유형을 파악하여 유형별(진학형, 취업형, 직업훈련형)로 맞춤형 개입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가령, 진학형인 경우는 학교는 나왔지만 학업은 계속하고 싶어하는 유형으로서 검정고시나 방송통신고등학교 편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본인이 중퇴를 후회하고 학교로 가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절차를 거쳐 복교시킨다. 중퇴후 취업형은 취업을 알선하는 한편, 대인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담 서비스, 그리고 장기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지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직업훈련형은 직업훈련기관을 안내하여 훈련 과정에 참여한 후 공인 자격증을 취득하여 자립을 준비하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내 관련부처간(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가족부+노동부) 업무공조가 필수적이다.

참고문헌

- 김기현 · 전상진 · 권혜수(2007), 청소년문제세미나-미래예측과 청소년상담-,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김만지(2002), 청소년의 첫 임신연령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 8권 제 2호. pp. 71-85.
- 김유경 · 조애저 · 노충래(2006), 미혼모의 출산,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연구보고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정휘(2001), 위기에 처한 청소년 지도의 이론과 실제, 서울: 민지사.
- 김현진(2001), 미혼모시설의 서비스개선방안,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영(2008), 미혼모정책 어디로 가야 하는가, 제 47차 여성정책포럼자료집,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Rich. L., 이수연(2000), 미국10대 미혼모의 학교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연구 제 16호, pp. 165-192.
- 보건복지가족부(2008), 보건복지가족백서,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신학용(2006), 리틀맘 실태와 보호대책방안, 서울: 국정감사자료.
- 여성가족부(2005), 미혼모 현황 및 욕구조사 통계표 내부자료, 서울: 여성가족부.
- 유미영(2007), 미국의 10대 임신과 예방을 위한 방법, 천정웅 편, 아동청소년복지, 서울 : 인간과 복지.
- 윤미현 · 이재연(2003), 한국 10대 미혼모 특성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제 22권 제 3호, pp. 149-169.
- 윤철수, 진혜경, 안정선(2006), 학교교육과 복지, 양서원.
- 장순복 · 김소야자 · 한인영 · 박영주(2000), 10대여성의 임신실태와 예방대책, 서울: 청소년보호위원회.
- 정옥희(2002), 엄마가 된 아이들-청소년 미혼부모 연구-, 서울: 인간과 복지.
- 최양자 · 김귀분(2004), 미혼모경험, 여성건강간호학회지, 제10 권 제 4호, pp. 331-341.
- 한인영 · 홍순혜 · 김혜란 · 김기환(1999), 학교와 사회복지, 서울: 학문사.
- 허남순 · 노충래(2005), 미혼모부자 종합대책에 관한 연구보고서, 서울: 여성가족부.
- 홍순혜 · 김혜래 · 이혜원 · 변귀연 · 정재훈 · 이상희(2007), 청소년미혼모의 교육권 보장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
- Douglas, B.(1997), Parenting teenage parent : A clinic's note, *Family Relations*, Vol 46, pp. 186-189.
- Fursterberg F., and Christopher W.(1997), *Schooling together: Mutual influences on educational success of teenage mothers and their children*, PA: University of Pennsylvania.
- Guttmacher Institute(2006), *U.S. teenage pregnancy statistics national and state trends and trends by race and ethnicity*, N.Y.
- Rich L. M., and Kim S. B.(1999), Patterns of later life education among teen mothers, *Gender and Society*, 13(6), pp. 798-817.
- Spear H. J.(1997), *Teenage pregnancy : The experience of adolescent females who attend an alternative schoo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Virginia University.
- 위클리조선, 2008년 7월 14일자 위클리뉴스 : 위험하기 그지없는 리틀맘신드롬.